북·중·러 연합의 형성과 전개

신냉전의 불가피한 결과인가? 일시적인 밀착인가?

2023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안 정 은 (북한연구학회)

통일부장관 귀중

목 차

요약문 ····· 1

I. 서론 ····· 4

가.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4

나. 선행연구검토 ····· 7

다. 연구구성 및 기대효과 ····· 9

II. 북·중·러 연합의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과 문제(coordination problem) · 1

III. 북·중·러 연합의 형성과 전개 ····· 14

가. 탈냉전 이후 북·중·러 3국의 양자관계 형성 ····· 14

나. 새로운 대립 속에서의 북·중·러 연합 전개 ····· 16

IV. 북·중·러 연합의 조정문제(coordinationa problem) ····· 29

가. '신냉전'에 대한 관점 차이 ····· 29

나. 접경지역과 지정학적 전략의 경쟁 ····· 33

다. 훼방자에 대한 연루 문제 ····· 39

V. 결론 및 시사점 ····· 49

참고문헌 ····· 51

요약문

2018년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미·중 전략경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으며, 냉전 이후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이 쇠퇴하던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처럼,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핵위협,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이슈가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연구자와 언론은 탈냉전이 끝나고 '신냉전'이 도래했으며, 동북아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화성-17형》 발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고, 북핵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최소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흐름을 오판하는 것이 아닌 방증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북한의 우군을 자처하거나, 코로나19로 폐쇄되었던 교역 등을 재개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분명히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중·러가 한·미·일과의 대척점을 만들며 밀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척점에 대해서 냉전 시대와의 유사한, 즉 새로운 냉전 시대, 즉, '신냉전'의 결과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러의 밀착이 정말로 냉전 때와 같이 신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필연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반동적 대미정책의 모습으로서 일시적으로 단순 밀착하는 형태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러 연합을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의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정게임은 게임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이 전체 집단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략을 조정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북·중·러 연합은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반동적인 대미정책이라는 최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국의 전략을 조정하고 협조하여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중·러가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의 행위에 따라 일시적인 밀착행위만을 이어가고 정확한 조정을 공약하지 않고 있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중·러 연합의 전개 사항을 살펴보고, 조정게임을 통해 이들의 연합이 확정된 안정성 위에서 전개되는지, 아니면, 불확실한 일시적 밀착관계가 전개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북한·미국 구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경각심과, 미·중경쟁의 시작 및 미국의 중국견제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으로 인한 제재,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 반동적 대미정책 및 한·미·일 연합의 대척점을 형성한다는 포컬포인트를 잡게 된다. 이에 따라, 북·중·러 연합을 형성하여 각국의 전략을 조정하는 조정게임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중·러 3국이 모두 그들의 전략을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대연합'을 구성해서 안정적인 조정을 통해 밀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시험대에 참여하는 3국이 공통된 조정된 전략을 선택해 어떤 전략이 포컬포인트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고민하기보다, 각국이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합리적 전략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면 조정은 불확실해지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의 언급을 지양하며, 미국과 서방의 정책을 냉전적 사고 등으로 비판하고 자신들을 다극화의 중추행위자로 언급할 때 북한은 신냉전의 흐름을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바라보며 북·중·러 연합의 강화를 외치고 정치적 우군을 만드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처럼 연합의 기본 틀이 되는 포컬포인트인 신냉전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각국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즉, 신냉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이들의 연합이 내재적인 포컬포인트가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즉 미국과 서방이라고 하는 신냉전을 만드는 경쟁 상대에 의해서 포컬포인트가 형성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냉전과 같이 '공산주의'라는 진영의 내재적 포컬포인트가 아닌, 외재적인 변수에 의해 포컬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미국과 서방의 전략이 변화해서 행위자 별로 상이한 이익이 발생할 때에, 연합이 존속되기란 어렵다.

또한, 조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들이 필요하지만, 공동성명, 조약 등을 통한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해도 국가 간의 연합에서 제도라는 것은 유명무실할 수 있다. 특히,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동일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각국은 자신의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에 합치되는 이해관계를 선별하려고 한다. 즉 연합 내부의 권력 배분에 따라서 특정 연합이 결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중국이 러시아, 북한보다 강할 경우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에 대한 편승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의 상대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쟁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익을 얻지 못한 국가가 방기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차이가 미미할 경우 권력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중·러와 같이 접경지역을 맞대고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더 나아가, 연합에서 내부파괴적 요소란 무엇인가? 훼방자의 역할이 될 것이다. 훼방

자는 이익을 보거나 이길 수 없지만, 더 나아가 다른 행위자까지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든다. 북·중·러의 연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이 각각 훼방자가 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훼방에 대해 연루 문제는 연합의 존속에 위험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연루는 앞서 언급했던 방기와 함께 연합 내부의 권력 배분과도 연계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및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UNSC의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북·중·러의 밀착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응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중·러 연합의 형성과 전개:
신냉전의 불가피한 결과인가? 일시적인 밀착인가?

I.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2018년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미·중 전략경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또한, 냉전 이후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이 쇠퇴하던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처럼,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핵위협,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이슈가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연구자와 언론은 탈냉전이 끝나고 '신냉전'이 도래했으며, 동북아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1)]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은 2022년 10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issile Defense Review: MDR)』 등 미국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지침서를 일괄 공개하면서,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러시아 역시 또 다른 중대 위협으로 상정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 본토 및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했다. 특히, *NSS*에서 미국은 세계가 '변곡점(inflexion point)'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경쟁자(only competitor)"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10년 동안 중국과 경쟁할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즉각적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의

---

1) 김태효,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신아세아』, 제28권 제2호 (2021), pp. 113~126; 반길주,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1호 (2021), pp. 1~53; 김철민,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유럽, '신냉전 무대' 부상과 대응 현황," 『EU연구』, 제63권 (2022), pp. 207~246; 류동원, "21세기 미·중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22), pp. 333~362; 장시영·남궁영, "도전받는 미국의 헤게모니: 중·러의 도전과 진영 형성에 따른 신냉전 가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제1호, (2023), pp. 1~53; "[지구촌 돋보기] 신냉전과 동북아," 「KBS 뉴스」, (온라인), 2023년 6월 22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5633&ref=A>; "유엔도 북핵 제재 못한다…신냉전 구도 강해지며 기능 상실," 「한겨레」, (온라인), 2023년 6월 26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7429.html>.

심각한 위협을 관리하며 공동의 과제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2)]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을 반대하고 지정학적 충돌과 강대국 경쟁을 과장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은 환영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중국과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고 있는 최대 선진국으로서 건전하고 꾸준한 협력의 궤도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3)]

이에 앞서, 2022년 9월 20일 당시 중국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현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냉전 시기 최초로 베이징에 특사로 극비 방문하여, 닉슨 대통령의 방중 및 미·중관계를 정상화하고 '하나의 중국'을 선언한 공동선언인 「상하이 코뮈니케(Shanghai Communiqué)」를 끌어낸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면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양국을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재난임을 강조했다.[4)] 또한,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중 관계는 경쟁이 아닌 충돌이 되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라인을 유지해야 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중국은 현재의 국제질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신냉전 시대일 필요가 없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밝혔다.[5)]

이처럼 두 강대국이 '신냉전'의 흐름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중, 2023년 1월 1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과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였다. 특히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대응방향이 천명되였으며 **미국의 동**

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22), pp. 10~23.
3) Mao Ning,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3, 20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13,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13_10782991.html>.
4) 문예성, "왕이, 키신저 만나 "대만문제 통제 급선무…아니면 미·중 판 뒤집혀"," 「뉴시스」, (온라인), 2022년 9월 20일;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0_0002020055>.
5) 테사 웡,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 중국과 '신냉전 없을 것'," 「BBC News」, (온라인), 2022년 11월 15일; <https://www.bbc.com/korean/news-63632939>.

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리였다."[6]

북한은 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화성-17형》 발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7] 이에, 북핵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최소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흐름을 오판하는 것이 아닌 방증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완화하도록 북한의 우군을 자처하거나, 코로나19로 폐쇄되었던 교역 등을 재개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2022년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8]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5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에서 미국이 주도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는 거부권(veto)을 행사했다.[9] 또한, 2022년 코로나19 방역 완화 추세로 폐쇄되었던 북한과 중국의 육상, 해상 교역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두만강-하산(Khasan) 화물 열차 등의 운행이 재개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1월 29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야말로 로씨야(러시아)의 전략적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조성하고 지역정세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적으로 두둔했다. 다음날인 30일, UNSC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비공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응 조치 합의가 무산되었다. 또한, 7월 27일 북한이 정전협정일[10] 70주년 기념식에 러시아 및 중국 축하사절단의 열병식 참석을 통해 ICBM을 비롯한 전술·전략미사일 행렬을 참관하면서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중·러가 한·미·일과의 대척점을 만들며 밀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대척점에 대해서 대부분 냉전 시대와 유사하다며 새로운 냉전 시대, 즉, '신냉전'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러의

---

6)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3년 1월 1일.

7) Missile Defense Project, "Missiles of North Korea," *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une 14, 2018, last modified November 22, 2022;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8) Brad Lendon and Gawon Bae, "North Korea not telling the whole truth about latest ICBM test, South Korean official says," *CNN*, March 31, 2022; <https://edition.cnn.com/2022/03/31/asia/north-korea-missile-test-misinformation-intl-hnk/index.html>.

9) Michelle Nichols, "China, Russia veto U.S. push for mor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Retuers*, May 27, 202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russia-veto-us-push-more-un-sanctions-north-korea-2022-05-26/>.

10) 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또는 '전승절'로 명명함.

밀착이 정말로 신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필연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반동적 대미, 대서방정책의 모습으로서 일시적이고, 단순 밀착하는 형태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나. 선행연구검토

북·중·러 연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먼저, 이들의 연합을 '삼각관계'로 정의하고, 그 특징을 양자관계를 통해 분석하고, 내부 역동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11]가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를 가장 단순한 국제체제로 정의하면서, 국제정치의 삼각관계는 세 국가와 세 양자관계가 긴밀히 연계되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받는 체제로 설명하는 데 기인한다. 즉, 양자관계가 삼각관계로 발전하는 순간 폐쇄된 삼각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순환적 메커니즘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정철·백준기·김재관·이남주[12]는 2013년 당시 동아시아 환경변수에 대해 기존에 언급되었던 '북방 삼각체제' 개념이 아닌 삼각관계의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독자 메커니즘보다 각국과 미국의 양자관계와 삼자관계 사이의 역동적 관계, 삼자관계의 내적 발전 가능성과 제한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삼각관계는 3자 협의의 체계화나 제도화가 아닌 양자관계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양자관계가 항상 다른 양자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역동성을 핵심으로 한다.

더 나아가,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13]는 '삼자동거', '낭만적 삼각관계', '안정적 결혼' 등 삼각관계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최재현[14]은 북한의 핵실험 강도에 따라 북한 주도의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인지적 안정과 삼각경영관계를 형성하려 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입장 차이로 양자협력관계 유지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흐름은 외부위협 변수로 인하여 북·중·러 협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신범식[15]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 구도를 한·미·일 삼각관계를 축으로 하여 한·중·일, 북·중·러 삼각관계가 느슨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상

---

11) Robert Jervis,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Chpater 5.

12) 이정철·백준기·김재관·이남주,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3)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4 (1981), pp. 485~515.

14) 최재현,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관계의 변화: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권 제6호 (2022), pp. 1261~1276.

15)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이론과 현실," 신범식 편,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서울: 도서출판 이조, 2018), pp. 11~49.

대적으로 미비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북, 일·북, 남북관계가 구조적 공백의 한 축을 차지하고, 미·러, 러·북 관계가 다른 한 축을 차지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북·중·러 삼각관계는 북·러의 연약한 고리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그 연결성이 강한 중·러 간 전략적 경쟁성을 관리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백준기[16]는 러·북 관계를 중심으로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외부의 위협에 대한 균형을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북·중·러 삼각관계는 비대칭적인 부등변 삼각형으로 비유되고 이러한 전략적 제휴관계는 '위협균형'과 '묶어두기/결박'이라는 행위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미국을 외부위협으로 인식하여 전략적 제휴를 통한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관[17]은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 및 '아시아 회귀' 정책이 북·중·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양세력인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륙세력으로서 북·중·러 삼각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삼자관계보다 양자관계가 더 크게 작동하면서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며 안정적인 레짐으로서의 제도화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흐름으로는, 삼각관계에서 '중추(pivot)' 행위자[18]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북·중·러 협력의 중추 행위자로 북한을 상정하는 연구가 있다. 길버트 로즈먼(Gilbert Rozman)[19]은 북·중·러 협력이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남북관계의 통합이 가능해지는 환경 속에서 북한이 자율성을 가지고 6자 회담에 참여했던 주변국들과 유리한 공간을 조각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허문영·유동원·심승우[20]는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균형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서, 북방동맹체제에 기반하여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립 및 집행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방삼각 동맹관계는 해양세력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형성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환경에서 북한이 비대칭 무기를 제외하고는 외부위협에 마땅한 수단이 없음을 지적했다. 박정민[21]은 북한과 상호협력 및 갈등요소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가하고, 미국 패권 견제 및 북한 관리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강화되고 있는 중·북관계, 중·러관계의 틈새를 공략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북방삼각관계의 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현재의 북방삼각관계가 냉전 시대처럼 이념적 동질성이 아닌 국가이익에 따라 형

16) 백준기, "러·북관계의 전략적 함의와 중·북러 삼각관계와의 전략적 상호작용－동맹, 균형, 그리고 위협인식－," 『아시아문화연구』, 제32권 (2013), pp. 181~221.
17) 김재관, "21세기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북러 삼각관계에 대한 고찰," 『동북아연구』, 제28권 제2호 (2013), pp. 6~42.
18) Robert Jervis,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Chapter 5.
19) Gilbert Rozman, *The China-Russia-North Korea Triangle After Kim Jong-un's Turn to Diplomacy*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2019).
20) 허문영·유동원·심승우,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21) 박정민, "러·북관계의 발전과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평화학연구』, 제14권 제5호 (2013), pp. 163~188.

성되고 있으므로 갈등과 협력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차두현[22]은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 삼각관계의 결속은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가치전쟁의 구도, 한·미 동맹 견제라는 3자 간의 공통된 이해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미견제 카드로서 '적극활용'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1인 독재체제를 공유함에 따라 삼각관계가 재강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23]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 구도가 있었지만,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인 고립을 탈피하고자 전략을 넘어서 신냉전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중·러 협력관계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했다. 노현종[24]은 탈냉전기 이후 북한에게 적대적이었던 국제질서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신냉전' 구조로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은 신냉전 구조의 견고한 형성을 위하여 두 국가를 적극적으로 '연루(entrapment)'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원곤[25]은 북한이 신냉전 담론을 통해 핵보유 정당성을 주창하고, 북·중·러가 지속성있는 하나의 진영 혹은 '한 참모부'로 기능하리라 생각하지만, 신냉전 세계관의 배경과 한계에 따라 이들이 '편의에 의한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북·중·러 연합을 '삼각관계'로 정의하고, 그 과정 및 특징, 그리고 내재적 또는 외재적 영향에 대해 주로 분석한다. 또한, 중추 행위자인 북한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적 프레임 속에서 북·중·러가 연합하고 협력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기보다는 밀착상황의 현주소와 그 실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북·중·러의 공조를 '삼각관계' 등의 유형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 전략을 조정하는 행위자의 집단을 의미하는 '연합(coalition)'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들의 연합을 '조정 문제(coordination problem)'의 틀에서 살펴보고 연합이 어떠한 환경에서 조정이 되거나, 결렬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조정이 신냉전 구도의 필연적 결과인지 일시적인 이익에 기반한 것인지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 연구구성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북·중·러 연합을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의 모델을 활용하여 분

22) 차두현, "최근 북한의 對중국 및 對러시아 관계: '북방 3각관계'의 부활?," 『이슈브리프』, 제2022호 제32권 (2022), pp. 1~13.
23) 임을출, "중·북러 협력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pp. 65~81.
24) 노현종, "냉전, 신냉전 그리고 북한," 『SNU AC 다양성+Asia』, 제21호 (2023); pp. 1~5.
25) 박원곤,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Global NK논평』, (2023), pp. 1~5.

석하고자 한다. 조정게임은 게임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이 전체 집단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략을 조정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북·중·러 연합은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반동적인 대미정책이라는 최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국의 전략을 조정하고 협조하여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중·러가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의 행위에 따라 일시적인 밀착행위만을 이어가고 정확한 조정을 공약하지 않고 있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중·러 연합의 전개사항을 살펴보고, 조정게임을 통해 이들의 연합이 확정된 안정성 위에서 전개되는지, 아니면, 불확실한 일시적 밀착관계가 전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및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UNSC의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북·중·러의 밀착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응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I. 북·중·러 연합의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과 문제(coordination problem)

국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서 다른 국가들과 합당한 수단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국익을 실현한다.[26] 합당한 수단에는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약속(commitment) 등 다양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 중, 협력(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은 다수의 행위자가 한 그룹으로 묶이면서 발생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동일한 개념처럼 혼동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념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27] 협력은 개별 행위자의 유인책(incentive)이 그룹의 목표와 같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조정은 개별 행위자와 그룹의 목표가 일치하지만, 목표가 불평등하거나, 전략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인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28]'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북·중·러의 밀착이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반동적 대미정책 또는 한·미·일 연합의 대척점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연합(coalition)을 만들고 전략을 조정하는 조정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북·중·러 삼국이 모두 그들의 전략을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면 이들이 '대연합'을 구성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모두 공통의 조정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이 최선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조정에서 협상은 명확한 의사소통 없이 비언어적 신호 혹은 기존의 선례 등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각의 행위자가 단일 행위자가 아니라 집단(collective body)일 경우에는 협상의 역학이 더욱 복잡해지므로, 중재자(mediator)가 등장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중재자가 등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북·중·러와 같이 3인 이상의 다수의 참여자가 다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는 공간모형(spatial model)이 만들어질 때는 다수결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하다. 이에, '꽁도르세 역설(condorcet pardox)'로 인

---

26) Kenneth A. Shepsl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eds. Sarah A. Binder, R. A. W. Rhodes, and Bert A. Rockman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3~38.

27) Bruce Kogut and Udo Zander, "What Firms Do? Coordination, Identity, and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vol. 7, no.5 (1996), pp. 502~518; Oliver E. Williamson, "Comparative Economic Organization: The Analysis of Discrete Structural Alternativ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6, no.2 (1991), pp. 269~296; Thomas W. Malone and Kevin. Crowston,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Coordination," *ACM Computing Surveys*, vol. 26, no.1, (1994), pp. 87~119; J. Keith Murnighan, Jae Wook Kim and A. Richard Metzger, "The Volunteer Dilemma,"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8, no.4 (1993), pp. 515~538.

28) Frank Heinemann, Rosemarie Nagel and Peter Ockenfels, "Measuring Strategic Uncertainty in Coordination Gam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6, no.1, (2009), pp. 181~221; John B. Van Huyck, Raymond C. Battalio and Richard O. Beil, "Strategic Uncertainty, Equilibrium Selection, and Coordination Failure in Average Opinion Gam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3, (1991), pp. 885~910.

하여 안정적인 대안이 선택되지 못하고 혼돈의 상황(chaos theorem)이 발생한다.[29] 결과적으로, 혼돈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마스 C. 쉘링(Thomas C. Schelling)[30]은 '포컬포인트(focal point)'를 제시했다. 포컬포인트는 "나와 상대방이 동일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때, 이 예측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기대와 자신의 의도를 합치시킬 수 있다,"고 정의된다. 그러나 빈센트 P. 크로우폴드, 유리 니지, 유벌 로튼스트라이히(Vincent P. Crawford, Uri Gneezy and Yuval Rottenstreich)[31]는 두드러지는 포컬포인트(salient focal point)가 설정되어도 각각의 행위자에게 불균형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정이 실패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에노 드 메스퀴타(Ethan Bueno de Mesquita)[32]는 조정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지 확신할 수 없고,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상대방의 이익(payoff)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어떠한 전략적인 설정도 포컬포인트를 제대로 설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어떠한 협조를 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즉, 북·중·러 삼국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대연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해진다. 즉, 삼국이 각각 다수의 행동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순응주의(conformism)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란 쉽게 형성되지 않으며, 순응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제도나 순응주의가 형성된다고 해도 최소 두 나라 간의 존재할 수 있는 연합조약(혹은 동맹)이 그 문제를 양자관계만으로 해결하는 포컬포인트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삼국 가운데 두 국가가 연합해서 나머지 한 국가를 따돌리거나, 견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던 삼각관계 내의 중추 행위자가 항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훼방자(spoiler)'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훼방자는 조정게임 내에서 자신이 최대이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행위자를 이기게도, 또는 패배하게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훼방자의 역할을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자신들의 평판(reputation) 등을 고려하여 훼방자가 포함된 조정에서 안정적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

29) Richard D. Mckelvey, "Intransitivities in Multidimensional Voting Models and Some Implications for Agenda Control,"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12, no.3, (1976), pp. 472~482.

30)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31) Vincent Paul Crawford, Uri Gneezy and Yuval Rottenstreich, "The Power of Focal Points Is Limited: Even Minute Payoff Asymmetry May Yield Large Coordination Failur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4 (2008), pp. 1143~1158.

32) Ethan Bueno de Mesquita, "Coordintation Problems," eds. Ethan Bueno de Mesquita, *Political Economy for Public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pp. 150~172.

가설 1. 북·중·러는 '신냉전'의 흐름 속 반동적 대미정책 및 한·미·일 구도의 대척점을 형성한다는 포컬포인트(focla point)에 따라 연합(coaltion)을 만들고 각국의 전략을 조정하는 조정게임(cooperation game)에 참여한다.

가설 2. 그러나, 북·중·러 연합의 포컬포인트에 대해 각 국가가 처하는 상황이 다르고, 전략이 달라지면서 서로에게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을 발생시킨다.

가설 3. 또한, 대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므로, 이익이 합치되는 특정 연합이 구성되거나 훼방자(spoiler)가 발생해서 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설을 통해 본 연구는 북·중·러 연합이 신냉전의 흐름 속 불가피한 결과로서 견고한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북·중·러가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의 행위에 따라 일시적인 밀착행위만을 이어가고 정확한 조정을 공약하지 않고 있는 불안정한 비협조체제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북·중·러 연합의 형성과 전개

냉전 시대 동안 반서방, 공산주의 진영으로서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동북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소련)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탈냉전 이후 이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변모했다.[33]

가. 탈냉전 이후 북·중·러 3국의 양자관계 형성

우선, 중국과 북한은 '순치(脣齒, 입술과 이)'[34]라고 표현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1961년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 즉 명실상부한 혈맹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경제적으로 1980년대 중·북 간 무역규모는 6억 9천만 달러에 달하였고,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35] 하지만 1991년 중국이 상무역 방식을 고집하는 북한과의 교역에서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1992년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이후, 1998년 김정일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북핵문제로 인해 중국이 UNSC에서의 대북제재에 참여하자,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만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또한, 2011년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고 중국통인 장성택이 숙청당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채널이 단절되었고,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면서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

러시아와 북한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탈냉전 이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함에 따라 이전의 전통적 우호동맹의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1996년에는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던 군사동맹조약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동맹조약)」을 파기하기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 2월 북한과 러시아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이념에 기초했던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 했다. 2000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에 이어서 2001년 '북·러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해 외교·경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핵문제로 인해, 러시아 또한 UNSC에서 고강도의 대북제재

33) 냉전시기 북·중·러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수호,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9), pp. 97~147;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2012); 돈 오버도퍼, 로버트 칼린 저, 이종길, 양은미 역,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 (서울: 길산, 2014).

34) 히라이와 슌지 저, 이종국 역, 『북한·중국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서울: 선인, 2013).

35) 신상진,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월간 통일경제』, 1995년 7월호, p. 41.

에 참여하고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경제제재로 신동방정책이 강화되면서, 대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입지 회복을 모색하고자 했다.[36] 북한의 채무를 90% 탕감해주고, 2015년에는 양국이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한 의정서를 서명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1991~1994)',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1996)',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1996~2011)',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1~2019)'까지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경제제재[37] 가 강화되자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한층 더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가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통화스왑(currency swap)협정을 체결했다. 2015년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로 논의했다.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양해각서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60억 달러 차관 제공 등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38]

그러나 2017년 미국에서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한다.

2017년 북한은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급 《화성-14호》를 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North Korea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또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If it is forced to defend ourselves or our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등 원색적인 경고를 이어나갔다. 이후, 북한이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UNSC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 2375호(2017.9.11.)[39]를 통과시켰다. 이때 UNSC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의 행보에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은 결연한 반대 및 강력 규탄을 통해,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직시와 UNSC 결의 준수 요구했으며, 상황 악화 행위 중지 및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은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UNSC 대북결의를 집행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을 밝혔다. 러시아 또한, UNSC 관련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더 나아가, 현 노선 유지는 북한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형》으로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 이후, 핵무력 완

36) 진행남, "동북아 국제체제 속의 대일외교 과제," 『JPI정책포럼』, no. 2015-14, p. 6.
37) 현승수 외, 『중·러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67.
38) 진행남, 위의 글, p. 8.
39) 유류공급 제한, 제재 대상 추가, 해상 검색 및 차단,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금지,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 유지, 운영 전면 금지 등

성을 선언한 뒤, UNSC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 2397호(2017.12.22.)[40]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정치-외교 활동을 통해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 행동 중단을 요구했다.[41]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42]이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원칙을 내세우며,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를 재편하고자 하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s)'으로 정의하고 주요 도전으로 상정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분류되었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주요 도전자로 분류되었다. 특히,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국가 주도 경제 모델 범위를 확장해서 그 지역을 유리하게 재정렬하려는 세력으로 정의되었고, 러시아는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경 근처의 영향권을 확립하려는 세력으로 정의되었다.[43]

이전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임기 내 발표되었던 2015년 *NSS*에서는 극단테러단체, 에볼라, 사이버안보, 러시아 침공 등 복합적인 도전들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붕괴시킬 수 없다고 주장[44]하던 것과 달리, 2017년 *NSS*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킬 주요 도전 세력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최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국·북한·미국 구도의 한반도 정세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에게 전통적으로 우호 세력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반도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예를 들면, '차이나패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45]

결과적으로 탈냉전 이후 북·중·러는 냉전 시대와 달린 약해진 연결고리 속에서 서로를 '혈맹'또는 '연대'한다고 언급했지만, 3국 동맹을 맺는 등 견고한 연합을 형성하지 못했다. 특히, 북핵문제는 북·중·러가 연합을 형성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나. 새로운 대립 속에서의 북·중·러 연합 전개

---

40) 유류공급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 '조업권 거래금지' 명문화, 해상 검색 및 차단 강화, 북한 인사 및 단체 제재명단 추가 등

41) 박영석 외,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p. 42~49.

4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43) 위의 책, p. 25.

4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5).

45) 안치영,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본 북미정상회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6.12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pp. 69~75.

그러나, 2018년 3월 25일~2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객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베이징을 방중하여, 시진핑 주석과 중·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두게 되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방중 이후 처음이자, 김정은 위원장 집권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46]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이후 연회에서 "조중 친선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혁명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관계이며,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라고 연설을 했다.[47] 그간 소원했던 중·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한 것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됨에 따라,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우호세력을 만들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48]

더 나아가, 홍콩 언론에서는 6월 9일 칭다오에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계기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도[49]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10월 11일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10월 4일 베이징을 찾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쿵쉬안유(孔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회담을 개최했고, 6일 모스크바로 이동해 이고리 모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무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한 다음 수순이었다. 이들은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UNSC 대북제재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성명에는 북·중·러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하는 공동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상호신뢰 구축을 기본목표로 하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상호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50]

그러나 미국은 앞서, 2017년 NSS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2018년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미국산 물품에 340억 달러 규모의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했고, 특히 핵심이익에 대한 전략경쟁이 보다 노골적으로 확대되면서 미·중 간 제2의 냉전이 임박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51]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나버리면서 한반도 정세와 미·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반면, 4

---

46) 박병광, "정상외교로 바라본 중·북관계: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제2018호 제7호, (2018), pp. 1~18.

47) 조정훈, "북.중, 전략적 의사소통. 협동 강화," 「통일뉴스」, (온라인), 2018년 3월 28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40>.

48) 위의 글, pp. 7~8; 전선미, "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 『KDI 북한경제리뷰』, 제2018권 제6월호, (2018), pp. 60~61.

49) 조문정, "홍콩 동방일보 "북미회담 사흘 전 북-중-러 3자 정상회담 예정"," 「SPN서울평양뉴스」, (온라인), 2018년 6월 1일;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6>.

50) 이용인, "북-중-러 3개국 "대북 제재 완화" 공동성명," 「한겨레」, (온라인), 2018년 10월 10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65297.html>.

51) 김갑식 외,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44.

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첫 러·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있어 러시아는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다른 대내외적 난국을 타개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대미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반대로, 러시아로서는 교착상황에 빠진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자국의 입지를 다질 기회의 측면이 있었다.[52]

6월,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관계'를 천명해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UNSC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강대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출신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하며, "외교가 우리 외교정책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었다,"며 동맹국 및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다자협력의 포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2021년 3월 3일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을 '적대세력(경쟁국)'으로 묘사하며 이전 행정부 보다 과감하게 경쟁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8월 6일 당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 회복을 바라면 정세긴장격화를 초래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8월 18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정부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데니소프(Andrey Denisov) 주중·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실시 중인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등 정세 긴장고조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53]

10월 29일에는 또다시 UNSC에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제출했던 결의안과 동일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11월 2일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데다, 해결노력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확고히 하고 관련국들이 이른 시일 안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조치를 취해온 만큼 그들의 정당하고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북한의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대북지원과 원조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UNSC가 마땅히 경제 민생 분야의 제재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가역조항'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

52) 유영철·노인규. "4.25 러·북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9), pp. 1~2.

53) 이광길, "중·러 "미, 북과 대화 원하면 긴장고조 행동 피해야"," 「통일뉴스」, (온라인), 2021년 8월 20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12>.

진하는 것이 대세인 만큼,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이 마땅히 지지하고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히며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54] 그러나 이에 대해, 11월 4일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모든 UN 회원국이 북한의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획득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UNSC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55]

하지만, 또다시 12월 20일 중국 류샤오밍 중국정부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러시아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태 차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과 입장이 고도로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12월 14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화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한 한층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를 구축했으며 한반도 문제 협력 방향 조율을 더욱 심화했다고 밝혔다.[56]

2022년에 접어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좀 더 밀착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친서외교를 펼쳤고,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과 푸틴을 순서대로 언급하며 삼국의 친선관계를 과시했다.

그와 동시에, 2022년 2월 러시아가 미국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가입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강대강 대결의 구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또한, 3월 24일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발사하고, 25일 《화성-17형》 시험 발사의 성공을 발표했다. 이어서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유예했던 모라토리엄을 공식 파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북한 전역에 지시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을 두둔했는데, 장준(张军) 주UN 중국대사는 “미국이 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주변 전략 핵무기를 배치함에 따라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4월 중국은 글로벌 안보 구상에서 ‘각국의 안보는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공동안보 ▲ 주권존중 ▲ 영토보전 ▲ 내정간섭금지 ▲ 안보불가분 원칙 ▲ 일방주의 반대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 지지를 표했다.[57]

5월 26일 미국이 주도한 UNSC 대북제재 결의안(S/2022/431)[58]에 처음으로 상임이사국

---

54) 이광길, “중·러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통일뉴스」, (온라인), 2021년 11월 3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72>.

55) “U.S. remains committee to U.N. sanctions on N. Korea: State Dept,” *Yonhap News Agency*, November 5, 2021; <https://en.yna.co.kr/view/AEN20211105000300325>.

56) 이광길, “중·러 북핵대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입장 일치”,” 「통일뉴스」, (온라인), 2021년 12월 21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27>.

57) 김다울·이정균,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vol.6, no.3, (2023); p. 3.

58)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하는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

인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59]하면서 파열음이 발생했다. 9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 주도의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2022'에 중국이 훈련에 참여했다.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는 중국 리잔수(栗戰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여해 "극동개발과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동북아 안전과 발전을 촉진하며, 중국은 세계 다극화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적극적 추진자"라고 밝혔다.

9월 8일에는 2020년 이래로 코로나19로 중국과 러시아로 통하는 육로와 철로, 항공로를 모두 차단했던 북한이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와 주러 북한대사가 회담을 가졌으며, 러·북 철도 화물 운송 재개 결정 환영 및 약국 간 여객열차 운행 재개 방안을 검토했다.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관련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축전을 발송했다는 것을 알렸다. 더 나아가, 9월 15일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규탄하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는 단극체제를 만들려는 서방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모범이 될 수 있으며 국제법과 UN의 중심적 역할에 기초한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다극적인 세계질서의 형성을 공통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9월 24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세계는 다극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10월 27일 러시아 국제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클럽(Valdai Discussion Club)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다극화된 세계질서의 새로운 중심과 서방이 공동의 미래에 대해 동등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1월 2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이고리 모르굴로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다원적 세계를 추진하고 단일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중심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국가나 국가연합이 존재하지 않는 단극체체를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발맞추어 비판하고 견제해 '다극적 질서'를 추구하는 규범 국가로서의 상징성을 얻으려는 시도가 공통의 이익으로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9월 19일에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무조건적인 우선순위'라고 밝혔고, 북한 또한 25일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의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였다.

10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NSS*[60]를 발표하고,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the only competitor)'로 정의하며, 탈냉전 이후 지켜졌던 국제질서를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재편할 의도를 가지고 그 능력을 키워나간다고 규정했다.[61] 러시아는 이웃 국가인 우크

한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300만 배럴로 감축하고,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37만 5천 배럴로 감소하는 제재가 주요 내용이다.

5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PV.9048," May 26, 2022; <https://daccess-ods.un.org/tmp/7675.5297504663.html>.

60)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22).

라이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잔혹하게 침공하여 유럽의 평화를 깨트렸고, 세계 안정에 영향을 미치며 무모한 핵 위협으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역량에 비해 모자란다고 평가했다.[62] 이와 함께 강한 NATO, 인도-태평양에서의 지역동맹,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 등을 언급하며 미국 중심의 동맹을 강조했다. 즉,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칩4 동맹(CHIP4)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구성하여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중국 봉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와 함께, 2022년 한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29일 한국 최초로 스페인에서 개최된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63] 이곳에서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만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고된 가운데 북핵 공조 강화 대응 방안 및 경제안보협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이어서, 11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포괄적 성격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64]을 채택하면서,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고,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등을 표명했다.[65] 2017년 이후 다시금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견고해짐에 따라 북핵수석대표회의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미국이 예고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지역동맹 파트너인 한·미·일의 견고한 공조 속에 주요 도전세력으로 겨냥되었던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경고이자 북핵위협이라는 포컬포인트에 따른 연합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발다이클럽회의(Valdai Discussion Club)에서 미국식 자유주의 질서는 혼란을 증폭시키고 편협해져서 미국이 동맹국에게 더 많은 제재를 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상식을 망치고 있으며, 북한의 안

61) 위의 책, p. 8.
62) 위의 책, p. 8.
63) 대한민국 대통령실, "尹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2022년 6월 29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cZ8GqfSW>.
64) 대한민국 대통령실,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3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11>.
65) 외교부, "한미일 정상회담," 2022년 11월 14일; <https://www.mofa.go.kr/www/brd/m_24806/view.do?seq=95&page=1>.

보이익을 포함해서 미국의 절대적인 무례한 태도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중국과 공동제안을 두 개의 문서로 공식화했다고 밝혔다.[66]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견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최대 이웃이자, 신시대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7]

11월 18일 북한이 《화성-17형》을 재발사함에 따라, 21일 UNSC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한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금 미국 책임론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2023년 1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자,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내용을 보도했다. "로씨야(러시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대리전쟁을 더욱 확대하여 저들의 패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있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로씨야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이어서, 3월에는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회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5차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재선출되고,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2030년 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 발전 계획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양국은 역외 군사력이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하며 관련 국가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고 자제하며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또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합당하고 합리적 관심에 호응해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재와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궤병진(雙軌竝進·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전환 동시 진행)' 접근방식과 단계적·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15일 중국 외교부는 불안전한 한반도 정세의 원인이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고 무력위협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4월 1일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다시금 "우크라이나 당국이 뒷일을 내다볼 초보적인 의식도, 그 후과를 감당할 아무러한 능력도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참화를 자초"했다고 담화를 발표하면서, 러시아를 지지했다. 그리고 4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워싱턴 선언[68]'이 발표되자, 북한은 "국제사

66) President of Russia,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meeting," October 27, 2022; <http://www.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695>.

67) Wang Wenbin,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28, 20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28,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28_10793767.html>.

회는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이 몰아올 부정적인 후과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Global Times*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균형을 잃었으며 이익보다 손실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 양국이 또 다른 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에 ‘악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또 다른 관영매체인 *China Daily*도 사설에서 오히려 윤 대통령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가속화 필요성이 역내 갈등 구조를 심화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 또한, “미국과 한국의 핵합의는 역내 및 국제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69]

5월 5일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다방면에서의 양국 관계 심화를 약속하며 ‘신냉전’과 다양한 형태의 패권에 대해 반대하며 BRICs, G20, UN과의 다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70] 5월 8일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러시아 무기 공급이 의심되는 중국의 7개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조치 검토 보고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과 EU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71] 또한, 9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레이더 시스템 공조에 대해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산물’을 군사협력에 활용하는 것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5월 20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로 개최한 G7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중국 주재 일본대사를 초치했으며[72], 이어서 21일 러시아 외부무는 성명을 발표해 “G7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 회의장을 ‘선동 쇼’로 만들고 반러시아,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73]

6월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한·미·일 해상차단훈련 비난 담화를 게재하여, “우리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러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실시했고, 중·러 군용기 8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인 KADIZ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이후 7일에는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일본 주변을 비행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부와 일본의 외교부는 강한 비판과 항의를 이어나갔다. 20일에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가 러시아, 중국, 북한

---

68) 차관보급의 한미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신설,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hip Submersible Ballistic Nuclear: SSBN)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및 한미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를 재천명하고 명문화했다.

69) 이해인, “중국 "워싱턴 선언 일본 참여 안돼"..중국매체와 한국대사관은 공방 벌여,” 「MBC」, 2023년 5월 8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1627_36199.html>; 장이주, “러시아, 한미 ‘워싱턴 선언'에 "불안정 초래할 것" 경고,” 「SPN서울평양뉴스」, (온라인), 2023년 4월 29일;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21>.

70) 장철운 외, 『KINU 한반도 동향 2023년 5월』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 7.

71) 위의 글, p. 8.

7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s Remarks on G7 Hiroshima Summit's Hyping up of China-related Issues,” May 20, 2023; <https://www.fmprc.gov.cn/eng/xwfw_665399/s2510_665401/2535_665405/202305/t20230520_11080748.html>.

73)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s release on G7,” May 21, 2023;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1871538/>.

등 3개 국가의 생산품을 한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었으나, 방역조치가 해제 될 때 대규모 노동력과 함께 3개 국가의 상공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74]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한국전쟁 정전 70년 동안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의 근원이자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쌍궤병진'을 강조했고,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에 의해 불균형한 군사활동의 전례 없는 증가와 공동 핵 계획 실행으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야망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을 촉발한다고 주장했다.[75]

또한, 러시아는 북한 당국 간 위원회 회의에서 장관급 소통을 재개해 나진-하산 공동 전략 프로젝트의 재건을 강조하였고, 석탄과 기타 화물을 다루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76] 사실상, 러시아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크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국과의 경합을 통해 나진항의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것은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장기적 포섭 행위로 분석되었다.[77]

그리고 북한의 정전협정일 70주년 열병식에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의 경우 2013, 2015, 2018년 북한의 주요 열병식에 축사대표단 주석단이 참석[78]했었으나 러시아대표단까지 함께 참석했던 것은 최초이다. 또한, 북한이 정전협정일 열병식에 외국 고위급을 초대하는 것은 10년 만이며, 2020년 북한의 국경폐쇄 첫 고위급 외빈 초청이었다. 이는 북한이 '신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반동적인 대미정책에 따른 북·중·러의 끈끈한 연대를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리훙중(李鴻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표단 방북을 "중·북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촉진하는데 도움"된다고 평가했다. 대공연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노래가 나왔으며, 두 나라 대표단은 공연에 앞서 각각 접견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

74) 최수호, "러 연해주 "北·中·러 상품 한곳서 거래하는 상공업단지 조성," 「연합뉴스」, (온라인), 2023년 6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119100096?section=north-korea/all>.

75) 오수진·조성흠·한종구, "중·러, 북한 편들기…"안보우려 미해결, 한반도 긴장 근원"(종합2보)," 「연합뉴스」, (온라인), 2023년 6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04052108?section=north-korea/all>.

76) 김지연·최인영, "러,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제안(종합)," 「연합뉴스」, (온라인), 2023년 6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8167951009?section=north-korea/all>.

77) 박상연, "중국과 러시아의 나진항 부두사용권 협상전략 비교," 신범식 편,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서울: 도서출판 이조, 2018), pp. 211~250.

78)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 열병식 개최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홍민,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온라인시리즈』, vol. 23, no. 18, p. 2.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서 더욱 주목받은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장관을 직접 영접했고, 김정은은 직접 쇼이구 장관과 무기 전시회를 찾아 신형무기들을 직접 소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러·북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불법무기거래의 의혹이 확산되었다.

이후,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5주년 기념행사에 중국이 류궈중(刘国中)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당·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고, 러시아는 군대 협주단을 보내서 다시 한번 3국의 밀착을 과시했다. 특히, 북한은 대표단이 가져온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여러 분야의 협조와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북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79]

이어서, 바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러·북정상회담이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 기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적 협력 및 인도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이례적으로 우주 기지에서 진행하게 되어, 북한이 원하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게 넘겨주고 두 국가 사이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은 러시아의 전투기 생산공장을 방문하거나, 러시아 전략 무기들을 시찰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 크렘린 궁은 "공개되면 안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에서는 20일 바로 90분짜리 관련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조로 관계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사변적계기"로 평가했다.

이어서, 10월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 양국의 밀착을 선전했다. 김정은은 "조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를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러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했으며,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특별군사작전[80]'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확고하고 원칙적인 지원을 깊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3국이 회담 및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동시 행동을 한 것은 대북제재의 재검토를 요청했던 2018년 외무차관급회담 뿐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발을 맞춰 담화를 발표해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 등을 지지하고 미국과 서방의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다극화', '미국과 그 동맹들의 적대행위', '우리 주변 국가' 등의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며 공세적인 대외전략의 당위성과 보편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처럼 일련의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향은 다음 【표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79) 정은미, "북한 정권수립일(9.9절) 기념행사에 주목되는 세 개의 시선," 『온라인시리즈』, vol. 23, no. 9, pp. 1~4.

80)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Ⅲ-1】 북한, 중국, 러시아 동향(2018~2023.6.)

일자	주요 행위국가	제목	내용
2018. 3.	북한, 중국	중·북정상회담(베이징)	- 중·북관계 정상화 및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복원
2018. 10.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회담	- 北 최선희, 中 쿵쉬안유, 露 이고르 모르굴로프 참석 - UNSC 대북제재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19. 4.	북한, 러시아	러·북정상회담 (블라디보스토크)	- 김정은 위원장-푸틴 대통령 첫 정상회담
2019. 6.	중국, 러시아	중·러정상회담 (모스크바)	-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관계' 천명
2019. 12.	중국, 러시아	UNSC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 미국, 영국, 프랑스 반대 무산
2021. 8.	중국, 러시아	한·미 합동군사훈련 비판	- 中 왕이 외교부장, 정세긴장격화 초래 행위 금지 촉구 - 中 류샤오밍 중국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露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러시아 대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등 정세 긴장고조 행위 지양 촉구
2021. 10.	중국, 러시아	UNSC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재제출	- 코로나19 등 북한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 완화 필요 강조 - 미국 국무부(11/4) 반대의견 표명
2021. 12.	중국, 러시아	한반도 문제 인식 공유	- 류샤오밍 중국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차관 전화면담, 한반도 문제 시각 공유
	중국, 러시아	중·러 화상정상회담	- 한층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 구축 및 한반도 문제 협력
2022.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 中,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지지 및 UN헌장 취지와 원칙 준수 강조
2022. 3.	북한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	-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 공식 파기 - 중국, 러시아 북한 두둔
2022. 4.	중국	글로벌 안보구상 발표	- 공동안보, 주권존중, 영토보전, 내정간섭금지, 안보불가분 원칙, 일방주의 반대 - 러시아에 대한 우회지지 표현
2022. 5.	중국, 러시아	UNSC 대북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	- 미국 주도 대북제재 S/2022/431 결의안 거부권 행사
2022. 9.	중국, 러시아	'보스토크-2022' 다국적 군사연습	- 러시아 다국적 군사연습에 중국 훈련 참여
	중국, 러시아	제7차 동방경제포럼	- 中 리잔수, "중국은 세계 다극화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적극 추진자"
	북한, 러시아	철도화물 운송 재개 검토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차단했던 육로 개방
	북한, 중국, 러시아	北 정권 75주년 축전 발송	- 中 시진핑, 露 푸틴 대통령 축전 발송 보도
	중국, 러시아	중·러정상회담	- '하나의 중국' 원칙 제시 - 다극적 세계질서 형성을 공통으로 지지
	북한, 중국	철도화물 운송 재개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차단했던 신의주-단둥

일자	주요 행위국가	제목	내용
			사이 화물열차 운송 재개
2022. 10.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발다이클럽 기조연설	- 다극적 세계질서를 추구 - 중국의 핵심이익을 강조 - 북한 문제는 미국에게 책임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시, 관계 파괴 시사
2022. 11.	중국, 러시아	中 외교부장- 주중 러시아대사 회담	- 다원적 세계 추진, 단일패권 부정
	북한, 중국, 러시아	北《화성-17형》 재발사에 따른 UNSC 내 논의	- 北 미사일 발사에 대해 中, 露 미국 책임론 제시
2023. 1.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발표	- 美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에 대해 강한 비판 및 러시아 지지
2023. 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회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5차회의	- 中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정
	중국, 러시아	중·러 정상회담	- 공동성명 발표 및 북한에 대한 지지표명 - '쌍궤병진' 접근방식 강조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 불안전한 한반도 정세 원인은 미국책임
2023. 4.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발표	- 우크라이나 비판, 러시아 지지
	북한, 중국, 러시아	한·미정상회담 결과 워싱턴 선언 관련	- 북·중·러 보복 시사, 한반도 역내 및 국제질서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이라 비판
2023. 5.	중국, 러시아	중·러 외교장관회담	- '신냉전' 및 패권 반대, 다자체제 협력 강화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 한·미·일 레이더 시스템 공조에 대해 '냉전의 산물'이라고 비판
	중국, 러시아	G7 관련 비평	- 中, 주중 일본대사 초치 - 露, 반러시아·반중국 정서 부추긴다고 비판
2023. 6.	중국, 러시아	제6차 연합공중전략순찰	-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북한, 중국, 러시아	연해주 정부, 상공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 북·중·러 3개 생산품을 한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북한, 러시아	나진-하산 공동전략 프로젝트 재건 논의	- 장관급 소통 재개, 나진-하산 공동전략 프로젝트 재건 강조
2023. 7.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열병식	- 중·러 대표단 참여 - 김정은에게 시진핑, 푸틴 친서 전달
2023. 9.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정권수립일(9.9절)	- 중국 당·정부 대표단 파견 - 러시아 군대협주단 파견
	북한, 러시아	러·북정상회담	-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개최 - 러시아 전투기 생산공장, 전략무기 시찰

출처: 각종 온라인 기사 및 정부 부처 브리핑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결과적으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북한·미국 구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경각심과, 미·중경쟁의 시작 및 미국의 중국견제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제재,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 반동적 대미정책 및 한·미·일 연합

의 대척점을 형성한다는 포컬포인트를 잡게 된다. 이에 따라, 북·중·러 연합을 형성하여 각국의 전략을 조정하는 조정게임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중·러 3국이 모두 그들의 전략을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대연합'을 구성해서 안정적인 조정을 통해 밀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시험대에 참여하는 3국이 공통된 조정된 전략을 선택해 어떤 전략이 포컬포인트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고민하기보다, 각국이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합리적 전략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면 조정은 불확실해지게 된다.

즉, 북·중·러의 연합의 포컬포인트에 대해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서로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을 발생시키고, 전략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연합 내 합리적인 전략이 협치되는 소연합이 구성되면서 대연합이 깨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연합 내 훼방자가 발생할 때 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IV. 북·중·러 연합의 조정문제(coordinationa problem)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던 북·중·러의 연합에게서 발생되는 조정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중·러가 연합하도록 이끌었던 포컬포인트를 어떻게 각 국가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대연합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의 유무를 확인하여 연합 내의 권력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합에서 중추 행위자에 버금가는 훼방자의 존재가 있는지, 만약 훼방자가 있다면 어떠한 조정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 '신냉전'에 대한 관점 차이

북·중·러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 포컬 포인트로는 '신냉전'의 흐름 속 반동적인 대미·대서방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냉전은 국제질서를 읽어낼 수 있는 한 시대의 흐름이자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냉전은, 냉전이나 탈냉전과 달리 정의나, 성격, 특성, 환경 등 정교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81], 그저 30년 전 이미 끝나버린 냉전을 대신해서 미·중, 미(서방)·러 대결[82]을 의미하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냉전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자본주의) 사이의 냉엄한 이념적 충돌로 인해 법적·제도적 양분화를 통한 집단방위체제가 명확했다면, 신냉전은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연성적인 비블록 유사동맹(non-block quasi-alliance)[83]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가 되어 신냉전의 한 축을 이끄는 주요 행위자처럼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속에서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모색했고,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시진핑 지도부는 ▲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 신형국제관계 건설 ▲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미국과의 신형대국국제관계를 구축하고, 내정불간섭 원칙,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 및 분쟁의 해결과 무력사용 반대 등을 추진정책으로 제시했다.

---

81) 반길주,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류동원, "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중국지역연구』, vol. 9, no.2 (2022), pp. 333~362.

82) 김기수, "구냉전과 신냉전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제2022권 제18호 (2022), pp. 1~24.

83) 유사동맹은 공통의 동맹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지 않은 두 국가 사이의 관계로, 집단 방위협정에 기초하지 않고 암묵적인 합의에 기초하는 비공식적인 안보협정이다; Victor D. Cha,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2 (2000), pp. 261~291.

그러나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경쟁이 시작되면서 공세적인 외교전략을 펼치며, 미국의 견제와 압박에 대해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은 미국과는 다른 국제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며 신냉전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84]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NSS*에 대해서도 중국은 "냉전 제로섬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고, *NPR*과 관련해서도 "강대국 경쟁과 블록 대립을 고조시키고 냉전과 제로섬 사고방식의 기미가 짙다,"[85] 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선진국"[86]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 다극화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적극적 추진자"[87]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칭하거나 확장을 꾀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글로벌 분명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세계는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생각을 밝혔다.[88] 또한, 6월 미국 빌 게이츠(Bill Gates)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옛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국의 최대 관심사이자,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89] 또한, 중국 리창(李强) 총리가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제14회 뉴챔피언연례총회(일명 하계 다보스포럼)의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 경제 성장과 자유무역을 위한 닻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강한 역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90]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의 '심오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장려 등의 성장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91] 이를 대비하여,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

84) 이동률,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②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셈법," 『Global NK 논평』, (2023), pp. 1~5.

85) Wang Wenbin,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28, 20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28,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28_10793767.html>.

86) Mao Ning,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3, 20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13,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13_10782991.html>.

87) 중국망, "리잔수, 제7차 동방경제포럼 본회의 참석 및 축사," 「중국망신문중심」, 2022년 9월 10일; <http://korean.china.org.cn/2022-09/10/content_78414240.html>.

88) 이보람, "시진핑 "中, 패권 추구 안 한다"…'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제안," 「중앙일보」, (온라인), 2023년 3월 1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7551#home>.

89) 최현준, "빌 게이츠 만난 시진핑 "중, '패권 추구' 옛 방식 답습 안 해"," 「한겨레」, 2023.6.1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96328.html>.

90) 陈畅, "中 리창 총리, '2023년 하계 다보스포럼'서 축사 전해," 「신화망 한국어판」, 2023.6.28.; <https://kr.news.cn/20230628/16140bba7fa64816a24abd7f7fa34bc2/c.html>.

91) CSF, "[서구권]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2023년 6월 22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639&mid=a20200000000&board_id=2&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

대외관계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 이하 '대외관계법')》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법은 중국 대외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목표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직권, 제도,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외 이익 보호'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법 조항에 명시하면서 중국의 법률을 역외에서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본 틀을 마련했다. 제33조의 경우,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반격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최종 결정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법 제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와 냉전적 제로섬 게임을 펼침에 따라, 국내법을 근거로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 관할을 적용하여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다.[92]

이처럼 중국은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패권경쟁을 피하고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금 신냉전으로 국제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신냉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상 러시아는 신냉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오히려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극적 국제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93]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공세적 국익방어외교를 강화함에 따라, 반미·반패권 연대의 구축을 꾀해왔으며, 유럽-유라시아-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전략의 복합성 속에서 중국과의 연대와 제휴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들은 냉전의 패배자로서 오래된 심리적 트라우마를 재소환하고, 양대 진영화와 위계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냉전의 개념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94] 또한, 2023년 3월 31일 새로 개정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에 따르면, 미국 및 서방과의 대결 자세를 견지하면서 비서방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95]

반대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는 구도로서 '신냉전'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고 있다. 냉전시기 진영외교와 다변외교를 통해 외교 영역을 확장하려던 북한이었으나, 탈냉전으로 공산권 붕괴 및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외교, 북핵문제에 따른 '불량국가' 낙인 등 우군 없이 UN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하고 포

---

rrentPage=2&pageCnt=10>.

92) CSF, "中 '대외관계법' 시행... 서방 제재에 맞설 국내법적 근거 확보," 2023년 7월 3일;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50744&mid=a20100000000>; CSF, "中 대외관계법 시행...국가 이익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권 명시," 2023년 7월 6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795&mid=a20200000000&board_id=2&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pageCnt=10>.

93) 이훈성, "중·북러 '신냉전' 동상이몽," 「한국일보」, (온라인), 2023년 4월 6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0515110003563>.

94) 장세호, "[Global NK 논평]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Global NK 논평』, (2023); pp. 1~5.

95) 현승수, "2023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특징과 시사점," 『Online Series』, CO 23-14 (2023), pp. 1~6.

괄적인 대북제재를 받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결과로 북한은 현재의 흐름을 '신냉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미 북한은 2008년 "《새로운 랭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제목으로 유일한 초대국인 미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에게 도전받는 다극화 추세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었으며, 끊임없이 반미정책과 미국 중심의 일극화를 비판했다.[96]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은 신냉전의 진영화 된 세계질서에서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의 공조는 '신냉전'의 조장 행위이지만, 북·중·러의 공조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선 '정당한' 다극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완하며, 전략적 기회의 공간을 확대하려고 한다.[97]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의 언급을 지양하며, 미국과 서방의 정책을 냉전적 사고 등으로 비판하고 자신들을 다극화의 중추행위자로 언급한다. 반면, 북한은 신냉전의 흐름을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바라보며 북·중·러 연합의 강화를 외치고 정치적 우군을 만드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처럼 연합의 기본 틀이 되는 포컬포인트인 신냉전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각국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즉, 신냉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이들의 연합이 내재적인 포컬포인트가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즉 미국과 서방이라고 하는 신냉전을 만드는 경쟁 상대에 의해서 포컬포인트가 형성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냉전과 같이 '공산주의'라는 내재적인 이념으로 묶인 포컬포인트가 아닌, 외재적인 변수에 의해 포컬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미국과 서방의 전략이 변화해서 행위자 별로 상이한 이익이 발생할 때에, 연합이 존속되기란 어렵다.

이러한 점을 미국 또한 분명히 직시하고 있는데,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NSS에 따르면 중국은 경쟁해야 하는 상대이지만, 공동의 도전(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98]

또한, 미국과 EU의 대중국 프레임이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중경쟁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공통이익을 조정하고자 대중정책 노선을 변경한다면, 북·중·러 연합의 기본적인 전제인 신냉전의 관점이 변화하게 되고, 각국은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이는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연합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들이 내부적으로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

96) 박원곤,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pp. 2~3.
97) 이훈성, "중·북러 '신냉전' 동상이몽,"; 장세호, "[Global NK 논평]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9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22), p. 25.

경과 구조에 놓여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다. 접경지역과 지정학적 전략의 경쟁

조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들이 필요하지만, 공동성명, 동맹 조약 등을 통한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해도 국가 간의 연합에서 제도라는 것은 유명무실할 수 있다. 특히,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동일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각국은 자신의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에 합치되는 이해관계를 선별하려고 한다. 즉 연합 내부의 권력 배분에 따라서 특정 연합이 결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99]

【표Ⅳ-1】 세계 국력 순위(1~10위, 2023)

순위	국가명	GDP($)	1인당 GDP($)	인구(2023)
1	미국	21,400,000,000,000	65,280	339,996,563
2	중국	14,300,000,000,000	10,217	1,425,671,352
3	러시아	1,690,000,000,000	11,498	144,444,359
4	독일	3,860,000,000,000	46,468	83,294,633
5	영국	2,830,000,000,000	42,354	67,736,802
6	일본	5,060,000,000,000	40,113	123,294,513
7	프랑스	2,720,000,000,000	40,380	64,756,584
8	한국	1,650,000,000,000	31,846	51,784,059
9	사우디아라비아	793,000,000,000	23,140	36,947,025
10	아랍에미리트	421,000,000,000	43,103	9,516,871

출처: U.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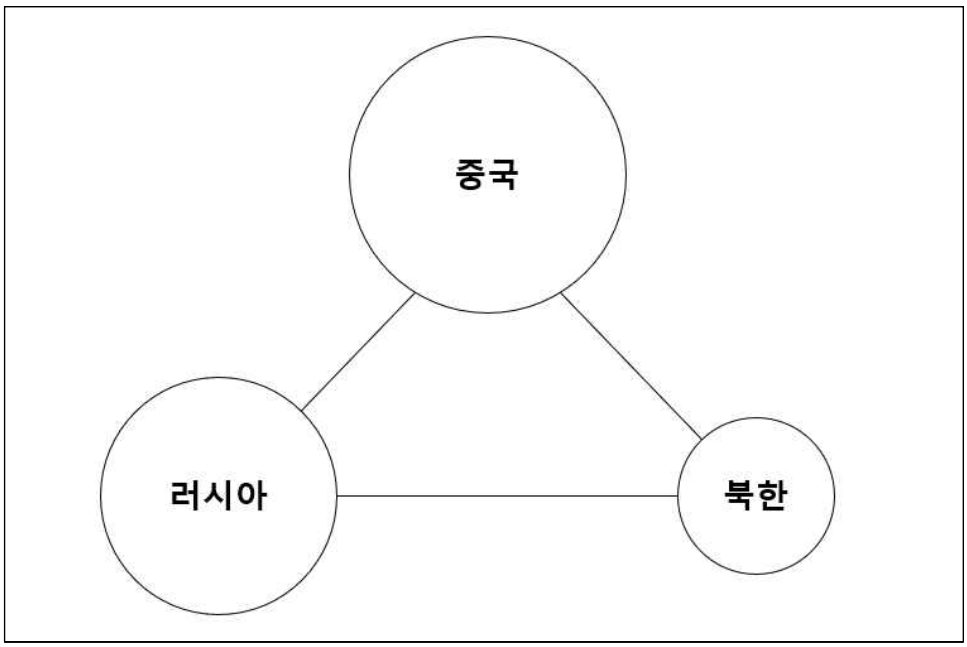
【표Ⅳ-1】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객관적 지표로 보았을 때 세계 국력 2, 3위이며, 2023년 군사력 지수(Global Firepower Indes: GPI)[100]에 따르면,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대국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국가이다. 세 국가는 서로가 동맹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북·중·러 연합의 내부 역학구도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99) Theodore Caplow,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1, no.4, (1956), pp. 489~493.

100) GFP, "2023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이에, 【그림Ⅳ-1】과 같이 중국이 러시아, 북한보다 강할 경우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에 대한 편승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의 상대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쟁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익을 얻지 못한 국가가 방기(abandonment)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차이가 미미할 경우 권력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Ⅳ-1】 북·중·러 연합의 국력 차이에 따른 도식화



출처: 저자 작성

이러한 현상은 북·중·러와 같이 접경지역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은 최근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인접 지역의 연계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동진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해 200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물류 인프라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동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01] 북한의 경우에는 라진·선봉경제특구를 통해 중국의 동진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을 기회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무원 직속 기구로서 관세부과, 밀수방지, 세관 경비 및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관총서(海关总署)가 지린성이 2023년 6월 1일부터 러시아의 블라디

101) 한은영, "러시아의 동진정책에서의 중국 변수와 지경지정학적 전망," 『동북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제2017권 제15호 (2017), pp. 1~18.

보스토크항을 중국 내륙 화물 중계항[102]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은 동북지역의 물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제재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서부 중심의 물류망을 운영하던 러시아는 극동지역으로 러시아의 물류망을 재편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중국의 동진에 대해 우려했으나, 오히려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려는 모습이 분석되고 있다.

【그림Ⅳ-2】 북·중·러 접경지역



출처: ArcGIS

그러나 과거에 중국은 북한과 합의를 통해 훈춘-나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10년 「나선경제무역지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구의 공동개발·관리」에 합의, 2011년부터 나진항을 통해 동북지역의 석탄, 곡물, 목재 등을 중국의 남부지역으로 운송했었다. 또한, 2012년 8월 「나선경제무역지구의 중·북 공동개발 계획과 산업구 계획」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함께 UN제재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나진항 사용이 잠정 중단되었다.[103]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극동의 최대 항구로서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에게 북한의 나진항을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된 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러의 협력이 달갑지만 않게 된다. 물론 3국의 접경지역 개발은 3국 모두 필요성을 절감

102) 국내 물류 이동 시 외국항구를 이용하여 자국 내 다른 항구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외국항구를 '내륙 중계항'이라 이름; 海关总署, "海关总署解读内贸货物跨境运输," 2007年 11月 1日; <http://fuzhou.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0/302272/337127/index.html>.

103) 이한나,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6권 제24호 (2023), pp. 1~10.

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의 이익이 중첩되거나, 위험-수익의 상충관계가 커질 때에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한에게 있어서 중·러 관계가 갈등보다 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러의 경쟁을 활용해서 보상을 얻어내던 과거와는 달라졌거나[104], 또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손해가 더 높을경우 굳이 북한을 경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중·북 간 접경지역의 투자와 경협과 관련된 선례에서 북한은 대외개방 관리, 정책 일관성, 개방 속도조절 등의 리스크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사례[105]가 있으며, 북·러 경제협력에서도 대러 채무상환 관련 문제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에서의 중·러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의 방기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중·러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청사진은 중국과 러시아가 접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와의 대외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로 바뀔 수 있다. 그 사례로 중앙아시아에서의 대외정책경쟁이 있다. 중앙아시아는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동쪽으로는 중국과 인접해 있다. 2000년대 미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이탈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106]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어느 한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라는 문명권을 만들어 러시아의 독자적 위상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에,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사실상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구소련의 구성국들로, 소련의 붕괴로 의도치 않게 독립했으며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거나, 국민 상당수가 러시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해외송금을 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107] 또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위하여 지역 안보 유지 및 지역통합,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다자협력기구 등을 활용했다. 군사협력을 위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 등을 설립했다.[108]

2023년 3월 러시아는 그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라는 단어 대신, '근외지역(Near Abroad)'이라고 지칭하면서 보다 러시아 중심적인 시각에서 중앙아시아를 관리하겠다

---

104) 임수호,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p. 129.

105) 정은이 외,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북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pp. 222~234.

106) 이주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중 사이의 잠재적 갈등과 전망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5권 제2호 (2021), pp. 287~324.

107) CSF, "中-중앙아시아 5개국 밀착...러시아의 세력 범위 견제하나?," 「이슈&트렌드」, (온라인) 2023년 4월 25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350&mid=a20200000000&board_id=2&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EB%9F%AC%EC%8B%9C%EC%95%84&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pageCnt=10>.

108) 이홍섭,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원인과 메커니즘," 『중소연구』, 제42권 제1호 (2018), pp. 171~200.

고 표명했다.[109]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중앙아시아 국가에게 러시아 지배력의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유라시아 주요 강대국들의 러시아 재부상을 억제하려는 전략과 맞붙을 수밖에 없고, 그 중 우호관계인 중국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고삐를 바투 잡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서진의 경유지로 삼고자 하며, 에너지 협력의 회랑으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5월 18일~19일 양일에 걸쳐 중국은 산시성 시안에서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수망상조, 공동발전, 보편적 안보 및 영원한 우정의 공동 미래를 가진 중국-중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携手建设守望相助、共同发展、普遍安全、世代友好的中国－中亚命运共同体)'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진행했다.[110]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 전방위적 상호이익 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 구축 강화 ▲ 경제·무역 관계 확장 ▲ 크로스보더 운송량 전면적 확대 ▲ 에너지 협력 확대(중국-중앙아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D라인 건설 등) ▲ 녹색혁신 ▲ '중국-중앙아시아 기술·기능 향상 계획' 실시 ▲ 중국 문명 실크로드 계획 참여 ▲ 지역 평화 유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시안 선언(中国—中亚峰会西安宣言)'[111]에 서명하고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과 목록'을 통과시켰다.[112]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31년 전 수교를 맺었으며, 그동안 교역액이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의 직접투자(FDI) 또한 올해 3월 말 기준 150억 달러(약 20조 원)가 넘었다.[113]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정상회담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G7 기간과 맞물리면서 미·중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이어졌으나,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판도가 바뀔 조짐이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114]

중앙아시아 지역을 향한 중국의 협력 제안은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기 때

---

109) 현승수, "2023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특징과 시사점," p. 4.

110) 习近平, "携手建设守望相助、共同发展、普遍安全、世代友好的中国—中亚命运共同体," *人民网*, 2923年 5月 20日; <http://cpc.people.com.cn/n1/2023/0520/c64094-32690647.html>.

11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国—中亚峰会西安宣言," 2023年 5月 19日; <https://www.fmprc.gov.cn/zyxw/202305/t20230519_11080194.shtml>.

112) 朱雪松, "시 주석,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재..."수망상조·공동발전·보편적 안보·대대로 우호 견지해야"," 「신화망 한국어판」, 2023년 5월 20일; <https://kr.news.cn/20230520/e1567ca6fd1e4b52ae1209111c6ee30f/c.html>.

113) 赵安琪, "在丝路起点, 中国与中亚将开启下一个"黄金30年"," *中国青年报*, 2023年 5月 18日; <http://news.cyol.com/gb/articles/2023-05/18/content_OVAxMGSWy0.html>.

114) 문수언,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하여 본 러시아와 중국 관계: 러시아의 우려와 대응," 『사회과학논총』, 제13호 (2011), pp.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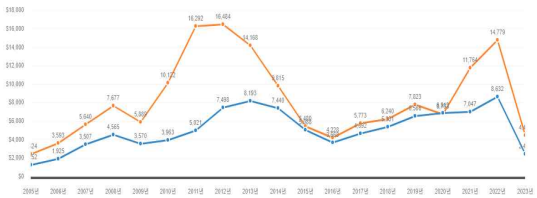
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 및 단순히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의 계획에는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Ⅳ-3】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간 수출입 통계(200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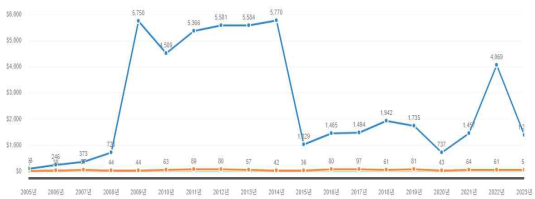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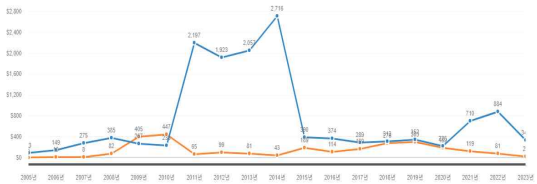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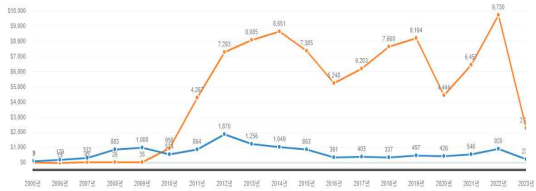
키르키즈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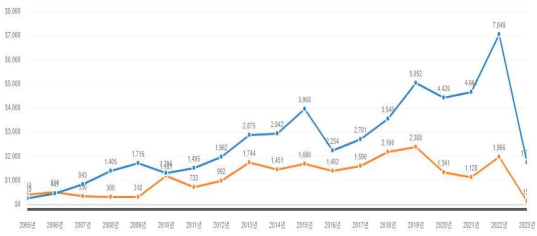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처: IMF; K-stat 해외무역통계.

이는 러시아 내 언론에서 상반된 평가로 입증된다. *Eurasianet* 등에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와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배척한다는 데에 합의했지만, 기존에 논의되어 온 이상의 새로운 협력이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115] 또한, 중국이 러시아가 추구하는 유라시아 다자협력의 틀이 아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관계를 맺게 될 경우에는,

115) Eurasianet,"China-Central Asia summit: lots of rhetoric, little substance," *Eurasianet,* May 19, 2023; <https://eurasianet.org/china-central-asia-summit-lots-of-rhetoric-little-substance>.

러시아의 질서를 훼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116] 결과적으로, 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갈등이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나, 대외환경과 지정학적 전략의 변화 속에서 중앙아시아로 하여금 두 국가 사이에 만들어진 연합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듯 연합 내부에 존재하는 권력 배분의 문제에 각자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내지 못하거나, 방기된다면 연합을 유지해야 하는 유인이 떨어지고, 오히려 연합을 방해하는 내부 파괴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파괴적 행위로 인하여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다른 행위자들 또한 이 연합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낮아진다.

라. 훼방자에 대한 연루 문제

연합에서 훼방자는 내부파괴적 행위를 이어가는 걸림돌이 된다. 훼방자는 이익을 보거나 이길 수 없지만, 더 나아가 다른 행위자까지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든다. 북·중·러의 연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이 각각 훼방자가 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훼방에 대해 연루(entrapment) 문제는 연합의 존속에 위험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연루는 앞서 언급했던 방기와 함께 연합 내부의 권력 배분과도 연계된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부터 시작해서, 2022년 전면전으로 확장되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서방의 동진정책이라 비판하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개시했다. 국제사회는 즉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미국은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교역 분야에서 첨단분야, 금융 분야까지 제재가 시작되었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교역 제재가 취해졌다.[117] 특히, 러시아를 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고,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시켜, 약 6,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환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도 했다.[118]

중국은 전쟁 이후 공식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5가지 입장(當前烏克蘭問題的五點立場)'[119]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UNSC의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있는 대국이므로 평화발전의 길을 견

116) 박지원,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 Asia』, 제2권 제3호 (2019), pp. 1~6.
117) 조영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SNU AC 다양성+Asia』 제17호 (2022), pp. 1~5.
118) 정호경,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제80호 (2022), p. 59~87.
11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王毅阐述中方对当前乌克兰问题的五点立场," 2022年 2月 26日; <https://www.fmprc.gov.cn/wjbzh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

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힘쓰며 패권과 권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UN 헌장의 원칙도 수호해야 하는 딜레마를 보다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 중국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5가지 입장(當前烏克蘭問題的五點立場)

연번	내용
1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이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도 적용된다.
2	중국은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개념을 옹호한다. 한 국가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시킬 수 없으며, 지역 안보는 군사 블록을 강화하거나 확장한다고 해서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냉전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하며,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안보 문제는 존중되어야 한다. NATO의 5차례 연속 동진의 경우,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적절하게 해결해야한다.
3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 상황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최우선 순위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자제를 행사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직접 대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크라이나 문제의 진화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으로 축소되기보다는 동서양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중국은 또한 유럽 안보 문제에 대한 EU와 러시아 간의 평등한 대화를 지지하고 불가분의 안보 개념을 견지하며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메커니즘을 형성할 것이다.
5	중국은 UNSC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모든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UNSC가 취한 조치는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진정시켜야 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무력 사용과 제재를 승인하는 제7장을 자주 인용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항상 반대해 왔다.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하지만 관영매체 등을 통해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은 미국의 패권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120], 2022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한 제11차 UN총회 긴급특별회의 소집과 관련한 결의안 2623호(S/RES/2623)[121]에 대해서 중국은 기권표를 던

120) 조형진·송승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국제질서의 변동과 중·러관계,"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4호 (2022), pp. 87~106.

졌다. 이후, 제11차 긴급 특별회의에 따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관련된 결의안 투표에서 중국은 상당수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표Ⅳ-3】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11차 UN총회 긴급특별회의 관련 투표 결과

연번	날짜	내용	최종 투표 결과	북·중·러 투표 결과		
				북한	중국	러시아
1	2022. 3. 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1/1 – "Aggression against Ukraine"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	반대	기권	반대
2	2022. 3. 2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1/2 –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찬성 140, 반대 5, 기권 38	반대	기권	반대
3	2022. 4. 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1/3 – "Suspension of the rights of member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Human Rights Council"	찬성 93, 반대 24, 기권 58	반대	반대	반대
4	2022. 10. 1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1/4 –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defending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찬성 143, 반대 5, 기권 35	반대	기권	반대
5	2022. 11. 1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1/5 – "Furtherance of remedy and reparation for aggression against Ukraine"	찬성 94, 반대 14, 기권 73	반대	반대	반대
6	2023. 2. 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1/6 -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lying a comprehensive, just and lasting peace in Ukraine"	찬성 141, 반대 7, 기권 32	반대	기권	반대

출처: UN.

경상(耿爽) 주UN 중국대사는 분쟁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UN이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며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다.[122]

121) United Nations, "Resolution 2623," February 27, 2022;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2/271/32/PDF/N2227132.pdf?OpenElement>.

122) United Nation, "With 143 Votes in Favour, 5 Against,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Condemning Russian Federation's Annexation of Four Eastern Ukraine Regions," October 12, 2022; <https://press.un.or

그러나 중국은 외교적 수사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123]

2022년 3월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전쟁을 중단하도록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자, 민간인에 대한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 공표하고, 적십자사를 통해 한화 10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124] 또한, 9월에는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은 결코 방관하지 않았으며, 불에 기름을 붓는 일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항상 평화의 편에 서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25] 12월에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협력의 초심을 고수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 2월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정치적 해결 관련 입장 12가지를 발표[126]하며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견지했다.

【표Ⅳ-4】 우크라이나 사태 정치적 해결 관련 중국 입장문(关于政治解决乌克兰危机的中国立场)

연번	내용
1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공인된 국제법,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까지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각국의 주권, 독립, 영토완정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대소, 강약,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평등하며, 각국은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함께 수호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 국제법은 평등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냉전사고를 버린다. 일국의 안보가 타국 안보의 손해를 대가로 할 수 없고, 지역 안보를 군사 결집 강화 나아가 확장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각국의 합리적 안보 이익과 입장은 중시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복잡한 문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토대로, 장기적인 세계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 유효,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 틀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자국 안보가 타국의 불안을 기반으로 세워

g/en/2022/ga12458.doc.htm>.

123) 위의 글, p. 1; 조형진·송승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국제질서의 변동과 중·러관계," pp. 94~95; 황상필, "시진핑 시기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5권 제2호 (2022), pp. 61~82; 정호경,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 p. 70; 표나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역할," 『IFANS FOCUS』, 제2022권 제11호 (2022), pp. 1~5.

124) 한종구, "[우크라 침공] 중국, 우크라에 10억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연합뉴스」, (온라인), 2022년 3월 9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041086?sid=104>.

125) 김태규, "中왕이, 우크라 외무장관과 회담…"평화 건설적 역할하겠다"," 「뉴시스」, (온라인), 2022년 9월 2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37358?sid=104>.

12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关于政治解决乌克兰危机的中国立场," 2023年 2月 24日; <https://www.fmprc.gov.cn/zyxw/202302/t20230224_11030707.shtml>.

	지는 것에 반대하고, 진영 대립을 막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
3	전쟁을 중단한다. 충돌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각국은 이성적으로 자제하며, 불 난 집에 부채질하지 않고 모순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층 악화되고 제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마주해 직접적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으로 점차 사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길 지지한다.
4	평화협상을 개시한다.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유일한 출구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이로운 노력이라면 권하고 지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평화협상을 권고하는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며,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태 해결을 위한 문을 조속히 열 수 있도록 도와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과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
5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한다. 인도주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라면 권하고 지지해야 한다. 인도주의 행동은 반드시 중립, 공정 원칙을 준수하고,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인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민간인의 교전 지역 철수를 위한 인도주의 회랑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하고,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며, 신속, 안전, 장애 없는 인도주의 진입으로 더 큰 규모의 인도주의 위기를 방지한다. 충돌 지역 내 유엔 측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공조 역할을 지지한다.
6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보호한다. 충돌 당사국은 국제 인도주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민간인과 민간 시설 공격을 피하며, 부녀자와 아동과 같은 충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전쟁 포로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포로 교환을 지지하고, 각국도 이를 위한 여러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7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지킨다. 원자력발전소과 같은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무장 공격에 반대한다. 각국은 핵안전협정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위적 핵사고 발생을 절대 막아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화적 핵시설의 안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
8	전략 리스크를 줄인다.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핵무기 사용 혹은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 핵확산을 방지해 핵위기 발생을 막는다. 어떤 국가도, 어떤 경우에도 생화학무기를 연구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9	식량 외부반출을 보장한다. 각국은 러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및 유엔과 체결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균형, 포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유엔의 중요한 역할 발휘를 지지한다. 중국이 제안한 국제식량안보협력 방안은 글로벌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시행가능한 방안이다.
10	일방적 제재를 중단한다. 일방적 제재와 극단적 압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안보리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 관련 국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일방적 제재 남용과 '간섭'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에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개도국가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11	산업라인 공급망 안정을 보장한다. 각국은 기존 세계 경제 시스템을 고수하며, 세계 경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반대해야 한다. 위기 노출 영향을 함께 줄이고, 국제에너지, 금융, 식량무역, 운송 등 협력에 대한 방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회복에 대한 타격을 막아낸다.
12	전후 복구를 추진한다. 국제사회는 충돌 지역의 전후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협력하고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자 한다.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국의 제안

이 조심스럽지만, 환영한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4월 26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나눴고,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라시아업무 특별대표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중재외교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127]

또한, 6월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막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Asian Security Council: ASC, 이하 샹그릴라대화)에서 리상푸(李尚福)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중국과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즈니코프 장관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환영하며, 중국과의 협상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128]

그리고 6월 23일 러시아 바그너그룹이 러시아 정부의 대응에 반발하며 무장반란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25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내정 문제이며 국가적 안정과 발전 및 번영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129]

이러한 중국의 미묘한 태도는 러시아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 행보로 인해 얻는 대외적 손실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한 지지는 서방의 대중국 불신을 야기했다. 러시아의 협력이 커질수록, 대러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커짐에 따라 미·중경쟁으로 인한 '탈중국(de-Sincinization) 정책'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고, 거대시장인 EU와의 관계가 복잡해지며,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우크라이나와의 농업 협력 등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중국이 강조했던 '책임 있는 대국', '인류운명 공동체' 등의 대외정책에 모순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대외이미지에도 손실이 가해진다.

또한,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인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중국과 밀착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양국 간 전체 교역량이 1천 850억 달러(약 한화 238조 2천억 원)를 기록했으며, 2023년도 1/4분기 총무역액 기준 중국의 일곱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량은 유럽에서 줄어든 물량을 상쇄하고 남는 수준으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오랜 기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경계해왔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러시아 언론사인 *Interfax*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조차도 중국과는 군사기술분야

---

127) 김지수, "시진핑, 젤렌스키와 통화…"대화·협상이 유일 출구"," 「연합뉴스 TV」, (온라인), 2023년 4월 27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7001400641>.

128) CSF, "샹그릴라 대화 미·중 국방장관 만남 불발…미국의 대중국 강경 어조는 누그러져," 2023년 6월 8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486&mid=a20200000000&board_id=2>.

129) Mao Ning,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June 26, 20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une 26, 2023; <https://www.fmprc.gov.cn/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306/t20230626_11103993.html>.

에서 협력할 뿐, 어떠한 군사동맹도 맺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130]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심화하는 중국 의존도에 따라, 러시아에게 있어 중국은 생존에 필수적인 우군이 되었다.

【표Ⅳ-5】 중국-러시아 수출·수입액(1998~2023년 2분기)

단위: 천불



참조: 2023년은 1분기까지의 데이터 취합

출처: IMF; K-stat 해외무역통계.

연루는 보통 동맹일 경우, 동맹 파트너의 안보이익에 따라 자신의 안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거나 군사 원조에 의한 안보딜레마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이 아니므로, 연루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 보인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대외이미지를 위하여 전통적인 동맹을 거부해왔다. 대신 '동반자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표명했다. '전면적'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하며, '전략'은 총체적인 부분 또는 핵심이익에서의 일치 및 협력 수준을 높인다는 뜻이 담겨있다.[131] 그러나 견고한 동맹 대신 동반자 관계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이 실리적 외교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시에 적도 만들지 않으려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현재 행보는 중국의 외교이념과도 맞지 않으며, 동맹이 아니지만 모호한 개념인 동반자 관계에 대한 연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및 전후 재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필요로 해진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밀착을 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동맹에 준하는 협력으로 인해 연루가 발생해서 자신들의 대외적

130) 정혜정, "푸틴 "中과 어떤 군사동맹도 안맺어…기술 분야는 협력"," 「중앙일보」, (온라인), 2023년 3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108#home>.

131) 왕리, "중국 외교의 "비동맹-동반자"이념," 『성균차이나브리프』, 제3권 제2호 (2015), pp. 142~148.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복합적인 글로벌 정세 속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을 거부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중국에게 편승하고자 하는 전략이 실패할 경우 연합의 축을 깨고 조정을 훼방할 수 있는 '훼방자'가 될 수 있다.

북·중·러 연합의 또 다른 훼방자는 북한이다. 3국의 연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북한은 주로 '중추' 행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부각되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북한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합 내 가장 약소한 권력을 가진 북한은 중추 행위자가 아닌 훼방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UNSC의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는 다르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이자, 뜨거운 감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북·중·러 연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편승하거나, 또는 밀착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에 방기 될 위험성에 놓여있다.

사실상,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서 상대방이 침략을 당할 때 자동개입조항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 차례 진정한 의미에서 동맹관계가 아니라고 밝혀왔다.[132] 또한, 중국은 북핵과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인식해오고 있으며, 쌍궤병행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와도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지만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동맹이라는 견고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전략이 변화하면 처지가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이미 북한은 탈냉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UNSC에서의 대북제재에 찬성하고, 함께 제재이행국으로 활동한 것을 경험했다.

그런 북한에게 2018~2019년의 경험은 북·중·러 연합의 틈을 만들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가 강대강의 교착국면으로 빠졌으나, 한때 미국과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초의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 1:1 협상을 진행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해 이익을 배분하는 다자회담의 형식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에, 북한에게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대선은 대외전략노선을 변경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우호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에 편승하는 상태에서 7차 핵실험 등 강력한 공세를 통해 존재감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7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전처럼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거나, 대북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보장할 수 없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핵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자신들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이 나빠지고 고립될

132) 위의 글, p. 142.

수 있으며, 미국과의 대립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매우 작은 나라이며, 아직까지는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와 규범 속에서 중국의 성장과 국익을 추구하고자 하므로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철저한 손익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손익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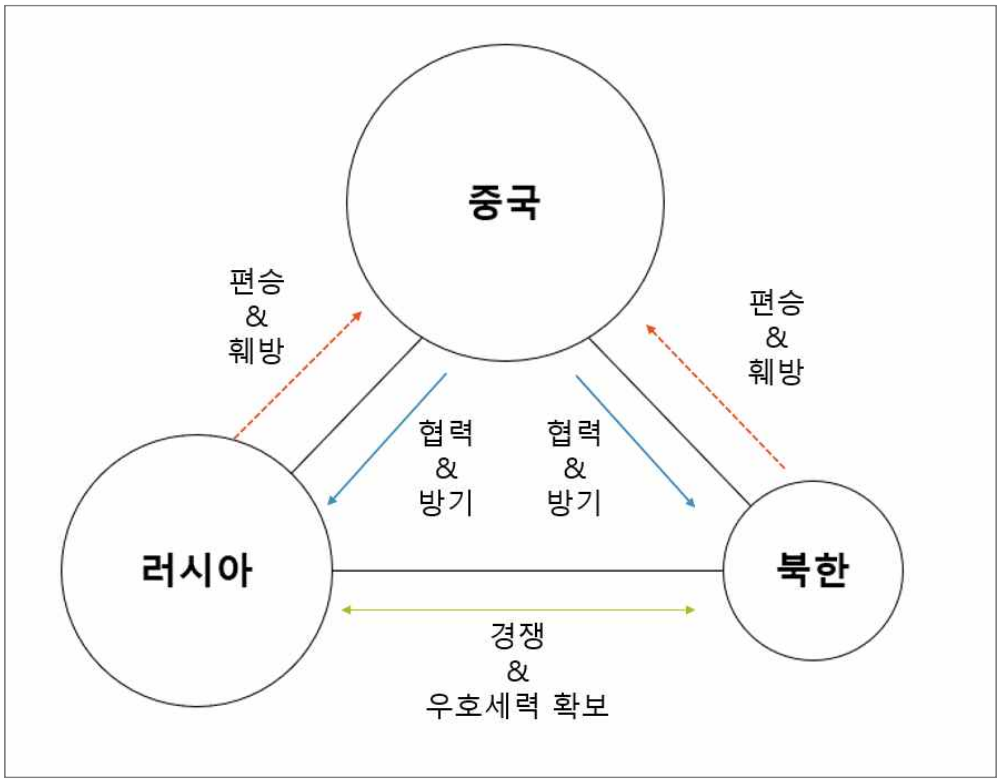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때 더욱 강한 대북제재 속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경쟁 등을 치열하게 이어갈 훼방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북·중·러 연합의 중추 행위자는 연합 내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냉전 시대에 안정적인 질서를 제공했던 소련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의 존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9월 러·북 정상회담 등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가 의심되고 있으며 군사협력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양국 간의 문제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중국이 이들과 연합을 하기에는 연루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1월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현재 연합의 판도가 매우 바뀔 확률이 크다.

러시아는 중국과 국력이 비슷해 보이지만, 중국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핵을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으며, 경제제재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전쟁 등으로 인해서 중국에게 편승하려 하거나, 또는 이익을 제대로 담보 받지 못했을 때는 연합의 훼방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훼방자인 북한과의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중국이라는 행위자를 움직여서 안정적인 연합의 협력으로까지 나아갈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또한, 가장 약소국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편승하려 하는 동시에 방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훼방자가 되어 다른 국가들을 연루하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2】 북·중·러 연합의 조정문제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러시아 경쟁 등 복합위기 속에서 밀착하고 있는 북·중·러 연합의 객관적 근거를 찾고자 시작되었다. 작금의 세태를 신냉전이라고 정의할 경우, 북·중·러의 연합은 당연한 추세로 보이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연합에서 전략적 이익과 협조의 모멘텀이 무엇인지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본 연구는 북·중·러 밀착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큰 프레임을 설정한 후, 이를 전제로 북·중·러의 관계를 이해하다 보니 밀착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러한 관계 유형으로 관찰하려는 흐름에서 나왔다. 이에 보다 더 이론적인 함의를 제고하고자 다자의 조정게임 모델을 통해 이들의 밀착이 어떻게 연합으로 구성되고, 그 연합이 존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북·중·러는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반동적 대미정책 및 한·미·일 연합의 대척점을 형성한다는 공통의 포컬포인트를 통해 연합을 만들고 전략을 조정한다. 그러나 북·중·러가 각기 '신냉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냉전 시대와 달리 진영이 아닌 반동적 대미(서방)정책에서 포컬포인트가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이 달라지며 서로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또한, 동맹 등 제도로서 이들이 대연합을 구성할 전제조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익에 따라 이익이 합치되는 특정 연합이 구성됨에 따라 협력에 있어서 나머지 한 국가가 방기 될 수 있는 리스크에 놓인다. 또는, 방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정을 훼방 놓을 수 있는 행위자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훼방에 연루될 것을 나머지 국가들이 두려워해 연합이 지속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이라 평가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며, 이들의 연합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관계 설정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틈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연합이 신냉전의 필수적인 결과물이 아닌, 일시적인 이익 연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서로 배척하는 삼각 연합의 형성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환경을 형성하는 데 전혀 유리하지 않다. 이러한 연합이 구조화되고 고착화 될 경우 긴장과 대결 구도가 점철되면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적인 이익 추구의 경쟁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외관계가 고려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양자택일을 강요받으면서 제로섬의 게임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북·중·러 연합에 의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중·러 연합이 일시적인 밀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우회적 옹호와 중·북 협력 중심의 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오히려 강화되고, 한·미·일 공조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으며,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략적 상황 속에서의 북한과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의 변화 및 중장기적 추세에 의해서 북한과의 협력이 오히려 부담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정책적 방안을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정책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중국정책의 차원에서 중국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중국이 북·중·러 연합의 중추 행위자로서, 북한과 소통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이므로 중국의 견인 역할을 지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이때, 미국의 대중견제를 레버리지 삼아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고되어진 미·중정상회담에서 앞서 한·미정상회담이 공동성명 등에서 언급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중국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러시아정책의 차원에서 그동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모멘텀을 살려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기회의 공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현안이 있으나, 실리적 외교 측면을 살려 기존에 구축한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안보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하는 것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임을 주지시키며, 한국 주도의 통일과 관련된 이익과 수혜를 러시아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한국의 대북정책 차원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의 최대 지정학적 리스크이자, 자율성을 최소화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고자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2018~2019년 기대했던 한국·북한·미국 3자 중심의 대화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미·북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가지고, 두 국가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공간적 모형을 한국이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여 단기적으로는 북·중·러 연합으로 인한 위협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냉전 구도를 해체하며 협력적인 선순환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Gilbert Rozman, *The China-Russia-North Korea Triangle After Kim Jong-un's Turn to Diplomacy*.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2019.

Robert Jervis.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5.

_____.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_____.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22.

_____.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22.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김갑식 외.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2.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2012.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 저. 이종길, 양은미 역.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 서울: 길산, 2014.

박영석 외.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이정철·백준기·김재관·이남주.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장철운 외. 『KINU 한반도 동향 2023년 5월』. 서울: 통일연구원, 2023.

정은이 외.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북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허문영·유동원·심승우.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현승수 외. 『중·러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0.

히라이와 슌지 저. 이종국 역. 『북한·중국관계 60년 :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서울: 선인, 2013.

2. 논문

Kogut, Bruce and Udo Zander. "What Firms Do? Coordination, Identity, and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vol. 7, no. 5 (1996), pp. 502~518.

Mesquita, Ethan Bueno de. "Coordintation Problems." eds. Ethan Bueno de Mesquita, *Political Economy for Public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pp. 150-172.

Heinemann, Frank, Rosemarie Nagel and Peter Ockenfels. "Measuring Strategic Uncertainty in Coordination Gam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6, no. 1, (2009), pp. 181~221.

Murnighan, J. Keith, Jae Wook Kim and A. Richard Metzger. "The Volunteer Dilemma."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8, no. 4 (1993), pp. 515~538.

Van Huyck, John B., Raymond C. Battalio and Richard O. Beil, “Strategic Uncertainty, Equilibrium Selection, and Coordination Failure in Average Opinion Gam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3, (1991), pp. 885~910.

Shepsle, Kenneth A.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eds. Sarah A. Binder, R. A. W. Rhodes, and Bert A. Rockman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3~38.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pp. 485~515.

Williamson, Oliver E. “Comparative Economic Organization: The Analysis of Discrete Structural Alternativ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6, no. 2 (1991), pp. 269~296.

Mckelvey, Richard D. “Intransitivities in Multidimensional Voting Models and Some Implications for Agenda Control.”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12, no. 3, (1976), pp. 472~482.

Caplow, Theodore.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1, no. 4, (1956), pp. 489~493.

Malone, Thomas W. and Kevin. Crowston.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Coordination.” *ACM Computing Surveys*, vol. 26, no. 1, (1994), pp. 87~119.

Cha, Victor D.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2000), pp. 261~291.

Crawford, Vincent Paul, Uri Gneezy and Yuval Rottenstreich. “The Power of Focal Points Is Limited: Even Minute Payoff Asymmetry May Yield Large Coordination Failur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 4 (2008), pp. 1143~1158.

김기수. “구냉전과 신냉전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제2022권 제18호, (2022), pp. 1~24.

김다울·이정균.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제6권 제3호, (2023), pp. 1~15.

김재관. “21세기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북러 삼각관계에 대한 고찰.” 『동북아연구』, 제28권 제2호, (2013), pp. 6~42.

김철민,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유럽, ‘신냉전 무대’ 부상과 대응 현황.” 『EU연구』, 제63권 (2022), pp. 207~246.

김태효.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신아세아』, 제28권 제2호 (2021), pp. 113~126.

노현종. “냉전, 신냉전 그리고 북한.” 『SNU AC 다양성+Asia』, 제21호 (2023), pp. 1~5.

류동원, “21세기 미·중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22), pp. 333~362.

문수언.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하여 본 러시아와 중국 관계: 러시아의 우려와 대응.” 『사회과학논총』, 제13호 (2011), pp. 1~33.

박병광. “정상외교로 바라본 중·북관계: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제2018호 제7호, (2018), pp. 1~18.

박상연. “중국과 러시아의 나진항 부두사용권 협상전략 비교.” 신범식 편,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서울: 도서출판 이조, 2018, pp. 211~250.

박원곤.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Global NK논평』, (2023), pp. 1~5.

박정민. “러·북관계의 발전과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평화학연구』, 제14권 제5호, (201

3), pp. 163~188.
박지원.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 Asia』, 제2권 제3호 (2019), pp. 1~6.
반길주.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1호 (2021). pp. 1~53.
백준기. “러·북관계의 전략적 함의와 중·북러 삼각관계와의 전략적 상호작용-동맹, 균형, 그리고 위협인식-.” 『아시아문화연구』, 제32권 (2013), pp. 181~221.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이론과 현실.” 신범식 편,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서울: 도서출판 이조, 2018, pp. 11~49.
신상진.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월간 통일경제』, 1995년 7월호, pp. 41~46.
안치영.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본 북미정상회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6.12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pp. 69~75.
왕리. “중국 외교의 "비동맹-동반자" 이념.” 『성균차이나브리프』, 제3권 제2호, (2015), pp. 142~148.
유영철·노인규. “4.25 러·북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9.
이동률.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②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셈법.”『Global NK 논평』, (2023), pp. 1~5.
이주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중 사이의 잠재적 갈등과 전망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5권 제2호 (2021), pp. 287~324.
이한나.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제6권 제24호 (2023), pp. 1~10.
이홍섭.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원인과 메커니즘.” 『중소연구』, 제42권 제1호 (2018), pp. 171~200.
임수호.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9, pp. 97~147.
임을출. “중·북러 협력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pp. 65~81.
장세호. “[Global NK 논평]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Global NK 논평』, (2023), pp. 1~5.
장시영·남궁영, “도전받는 미국의 헤게모니: 중·러의 도전과 진영 형성에 따른 신냉전 가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제1호, (2023), pp. 1~53.
전선미. “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 『KDI 북한경제리뷰』, 제2018권 제6월호, (2018), pp. 60~61.
정은미. “북한 정권수립일(9.9절) 기념행사에 주목되는 세 개의 시선.” 『온라인시리즈』. vol. 23, no. 9, pp. 1~4.
정호경.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제80호 (2022), p. 59~87.
조영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SNU AC 다양성+Asia』 제17호 (2022), pp. 1~6.
조형진·송승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국제질서의 변동과 중·러관계.”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4호, (2022), pp. 87~106.

진행남. “동북아 국제체제 속의 대일외교 과제.” 『JPI정책포럼』. no. 2015-14, pp. 1~17.
차두현. “최근 북한의 對중국 및 對러시아 관계: ‘북방 3각관계’의 부활?.” 『이슈브리프』, 제2022호 제32권, (2022), pp. 1~13.
최재현.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관계의 변화: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3권 제6호, (2022), pp. 1261~1276.
표나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역할.” 『IFANS FOCUS』, 제2022권 제11호, (2022), pp. 1~5.
한은영. “러시아의 동진정책에서의 중국 변수와 지경지정학적 전망.” 『동북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제2017권 제15호 (2017), pp. 1~18.
현승수. “2023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특징과 시사점.” 『Online Series』, CO 23-14 (2023), pp. 1~6.
황상필. “시진핑 시기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5권 제2호 (2022), pp. 61~82.
홍민.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온라인시리즈』. vol. 23, no. 18, pp. 1~17.

3. 북한자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3년 1월 1일.

4. 언론자료

“[지구촌 돋보기] 신냉전과 동북아.” 「KBS 뉴스」 (온라인), 2023년 6월 22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5633&ref=A>.
“China-Central Asia summit: lots of rhetoric, little substance.” *Eurasianet*, May 19, 2023; <https://eurasianet.org/china-central-asia-summit-lots-of-rhetoric-little-substance>.
“U.S. remains committee to U.N. sanctions on N. Korea: State Dept.” *Yonhap News Agency*, November 5, 2021; <https://en.yna.co.kr/view/AEN20211105000300325>.
“리잔수, 제7차 동방경제포럼 본회의 참석 및 축사.” 「중국망신문중심」, 2022년 9월 10일; <http://korean.china.org.cn/2022-09/10/content_78414240.html>.
“유엔도 북핵 제재 못한다…신냉전 구도 강해지며 기능 상실,” 「한겨레」 (온라인), 2023년 6월 26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7429.html>.
Brad Lendon and Gawon Bae, “North Korea not telling the whole truth about latest ICBM test, South Korean official says,” *CNN*, March 31, 2022; <https://edition.cnn.com/2022/03/31/asia/north-korea-missile-test-misinformation-intl-hnk/index.html>.
Michelle Nichols. “China, Russia veto U.S. push for mor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Retuers*, May 27, 202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russia-veto-us-push-more-un-sanctions-north-korea-2022-05-26/>.
김지수. “시진핑, 젤렌스키와 통화…“대화·협상이 유일 출구”.” 「연합뉴스 TV」, (온라인), 2023년 4월 27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7001400641>.
김지연·최인영. “러,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제안(종합).” 「연합뉴스」, (온라인), 2023

년 6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8167951009?section=north-korea/all>.
김태규. “中왕이, 우크라 외무장관과 회담…“평화 건설적 역할하겠다”.” 「뉴시스」, (온라인), 2022년 9월 2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37358?sid=104>.
문예성. “왕이, 키신저 만나 "대만문제 통제 급선무…아니면 미·중 판 뒤집혀.” 「뉴시스」 (온라인), 2022년 9월 20일;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0_0002020055>.
习近平. “携手建设守望相助、共同发展、普遍安全、世代友好的中国—中亚命运共同体.” *人民网*, 2023年 5月 20日; <http://cpc.people.com.cn/n1/2023/0520/c64094-32690647.html>.
오수진·조성흠·한종구. “중·러, 북한 편들기…“안보우려 미해결, 한반도 긴장 근원”(종합2보),” 「연합뉴스」, (온라인), 2023년 6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04052108?section=north-korea/all>.
이광길. “중·러 “미, 북과 대화 원하면 긴장고조 행동 피해야”.” 「통일뉴스」, (온라인), 2021년 8월 20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12>.
_____. “중·러 북핵대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입장 일치”.” 「통일뉴스」, (온라인), 2021년 12월 21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27>.
_____. “중·러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통일뉴스」, (온라인), 2021년 11월 3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72>.
이보람. “시진핑 “中, 패권 추구 안 한다”…‘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제안,” 「중앙일보」, (온라인), 2023년 3월 1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7551#home>.
이용인. “북-중-러 3개국 “대북 제재 완화” 공동성명.”「한겨레」, (온라인), 2018년 10월 10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65297.html>.
이해인. “중국 “워싱턴 선언 일본 참여 안돼”··중국매체와 한국대사관은 공방 벌여.” 「MBC」, 2023년 5월 8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1627_36199.html>.
이훈성. “중·북러 ‘신냉전’ 동상이몽.” 「한국일보」, (온라인), 2023년 4월 6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0515110003563>.
장이주. “러시아, 한미 ‘워싱턴 선언’에 “불안정 초래할 것” 경고.” 「SPN서울평양뉴스」, (온라인), 2023년 4월 29일;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21>.
정혜정. “푸틴 "中과 어떤 군사동맹도 안맺어…기술 분야는 협력”.” 「중앙일보」, (온라인), 2023년 3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108#home>.
조문정. “홍콩 동방일보 “북미회담 사흘 전 북-중-러 3자 정상회담 예정”.” 「SPN서울평양뉴스」, (온라인), 2018년 6월 1일;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6>.
赵安琪. “在丝路起点, 中国与中亚将开启下一个“黄金30年”,”中国青年报.” *中国青年报*, 2023年 5月 18日; <http://news.cyol.com/gb/articles/2023-05/18/content_OVAxMGSWy0.html>.
조정훈. “북.중, 전략적 의사소통. 협동 강화.” 「통일뉴스」, (온라인), 2018년 3월 28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40>.
朱雪松. “시 주석,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재…“수망상조·공동발전·보편적 안보·대대로 우호 견지해야”.” 「신화망 한국어판」, 2023년 5월 20일; <https://kr.news.cn/20230520/e1567ca6fd1e4b52ae1209111c6ee30f/c.html>.
陈畅. “中 리창 총리, ‘2023년 하계 다보스포럼’서 축사 전해.” 「신화망 한국어판」, 2023.6.28.; <https://kr.news.cn/20230628/16140bba7fa64816a24abd7f7fa34bc2/c.html>.
최수호. “러 연해주 “北·中·러 상품 한곳서 거래하는 상공업단지 조성.” 「연합뉴스」, (온라인), 2023년 6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119100096?section=north-korea/al

l>.
최현준. “빌 게이츠 만난 시진핑 “중, ‘패권 추구’ 옛 방식 답습 안 해”.” 「한겨레」, 2023.6. 1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96328.html>.
테사 웡.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 중국과 ‘신냉전 없을 것’.” 「BBC News」 (온라인), 2022년 11월 15일; <https://www.bbc.com/korean/news-63632939>.
한종구. “[우크라 침공] 중국, 우크라에 10억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연합뉴스」, (온라인), 2022년 3월 9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041086?sid=104>.

5. 웹자료

CSF. “[서구권]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2023년 6월 22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639&mid=a20200000000&board_id=2&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2&pageCnt=10>.
___. “샹그릴라 대화 미·중 국방장관 만남 불발...미국의 대중국 강경 어조는 누그러져.” 2023년 6월 8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486&mid=a20200000000&board_id=2>.
___. “中 ‘대외관계법’ 시행... 서방 제재에 맞설 국내법적 근거 확보.” 2023년 7월 3일;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50744&mid=a20100000000>.
___. “中 대외관계법 시행...국가 이익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권 명시.” 2023년 7월 6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795&mid=a20200000000&board_id=2&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pageCnt=10>.
___. “中-중앙아시아 5개국 밀착...러시아의 세력 범위 견제하나?.” 「이슈&트렌드」, (온라인), 2023년 4월 25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350&mid=a20200000000&board_id=2&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EB%9F%AC%EC%8B%9C%EC%95%84&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pageCnt=10>.
GFP. “2023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Mao Ning.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June 26, 20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s Republic of China*, June 26, 2023; <https://www.fmprc.gov.cn/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306/t20230626_11103993.html>.
_____.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3, 20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13,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13_10782991.html>.
_____.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3, 2022.”*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13,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13_10782991.htm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s Remarks on G7 Hiroshima Summit’s Hyping up of China-related Issues.” May 20, 2023; <https://www.fmprc.gov.cn/eng/xwfw_665399/s2510_665401/2535_665405/202305/t20230520_11080748.html>.
Missile Defense Project. “Missiles of North Korea.”*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

ational Studies, June 14, 2018, last modified November 22, 2022;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President of Russia.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meeting." October 27, 2022; <http://www.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695>.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s release on G7." May 21, 2023;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187153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PV.9048." May 26, 2022; <https://daccess-ods.un.org/tmp/7675 7.5297504663.html>.

United Nations. "Resolustion 2623." February 27, 2022;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2/271/32/PDF/N2227132.pdf?OpenElement>.

_____. "With 143 Votes in Favour, 5 Against,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Condemning Russian Federation's Annexation of Four Eastern Ukraine Regions." October 12, 2022; <https://press.un.org/en/2022/ga12458.doc.htm>.

Wang Wenbin,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28, 20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28,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28_10793767.html>.

_____.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28, 20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28,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28_10793767.html>.

대한민국 대통령실.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3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11>.

_____. "尹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2022년 6월 29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cZ8GqfSW>.

외교부. "한미일 정상회담." 2022년 11월 14일; <https://www.mofa.go.kr/www/brd/m_24806/view.do?seq=95&page=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关于政治解决乌克兰危机的中国立场." 2023年 2月 24日; <https://www.fmprc.gov.cn/zyxw/202302/t20230224_11030707.shtml>.

_____. "王毅阐述中方对当前乌克兰问题的五点立场." 2022年 2月 26日; <https://www.fmprc.gov.cn/wjbzh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

_____. "中国—中亚峰会西安宣言." 2023年 5月 19日; <https://www.fmprc.gov.cn/zyxw/202305/t20230519_11080194.shtml>.

海关总署. "海关总署解读内贸货物跨境运输." 2007年 11月 1日; <http://fuzhou.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0/302272/337127/index.html>.